

◎ 濟州島研究, 제 5 집, 1988. ◎

##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梁 漢 權\*\*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945년 8·15 해방으로부터 1948년 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의 남한의 정치사는 신탁통치와 통일정부수립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각각의 정치세력의 이합집산과 힘의 대결에서 반탁론과 남한 단독정부수립론이 승리를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에서 해방된 한국 민족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최초의 쟁점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었다. 한국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영·중의 4대국에 의한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남한의 정국은 신탁통치를 민족적 모멸로 간주하여 반탁을 “새출발로서 독립운동”(백범사상연구소 1978:54)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한민당 세력의 유화적 태도, 그리고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의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 등으로 가열되어갔다. 이러한 때 한국민주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소련과의 협상에서 난관에

\* 본 논문은 1988년도 서울대학교 大學院 政治學科의 碩士論文으로 제출·통과되었던 것으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록됨.

\*\* 서울 구로중학교 교사.

봉착한 미국은 카이로선언 이래로 계속 추구해왔던 대한정책인 신탁통치안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의 포기는 미·소 양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에 관한 최초의 타협안<sup>1)</sup>이 포기되었음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한반도 점령정책에 대한 미·소의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정치상의 변화는 한반도 점령정책에 관한 미·소의 새로운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함으로써 이제 문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형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독자적인 정치발전은 남북한 총선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남한의 정국은 이승만 및 한민당 세력의 줄기찬 남한 단독정부수립 공작과 김구의 임정세력 및 김규식의 민족자유연맹 세력의 남북정치회담을 통한 통일 노력, 그리고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에 의한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제주도 4·3폭동은 남북한 통일정부수립이라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그 시기를 같이하여 1948년 4월 3일 발발한 무장폭동이다. ‘매국단선’의 반대와 ‘미제’ 축출을 주장하면서 한라산에서 하산한 500여명의 무장계릴라들과 1,000여명의 동조자들의 도내 14개소의 경찰관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이 폭동은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의 5·10선거의 실시를 일차적으로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년여에 걸쳐서 도내의 행정과 치안을 마비시킴으로써 새로운 통치질서의 수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약 5년간 이승만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거부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4·3폭동은 그 발발의 경위와 발발 이후 진압되기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정치집단이 복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

1)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의 루우즈벨트와 스탈린의 논의를 생각하라. 루우즈벨트가 영·중·소의 대표로 구성된 한국신탁안을 제의하자,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만족할만한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왜 타치가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다. 루우즈벨트가 “필리핀의 자치정부를 준비하는데 약 50년이 소요되었음”을 상기시키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0년 내지 30년일 수 있다”고 대답하자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논평했다 한다(김학준 1981:18).

진 자체의 수습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으므로, 폭동의 결과로 나타난 제주도민의 실제적 피해와 피해의식은 그 이후의 통치질서의 수립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4·3폭동은 사건의 중요도에 비추어 학계의 뚜렷한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종전의 군관계 자료(육군본부 195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와 좌익계의 동향에 대한 연구(대검찰청 수사국 1965; 김남식 1984)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4·3폭동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4·3폭동에 관한 최근의 체계적인 연구업적으로는 김점곤, 김봉현, 그리고 J. Merri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서울: 박영사, 1983)은 4·3폭동에 대한 우파적 해석을 대표하는 것으로 4·3폭동과 당시 남로당의 투쟁노선과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다. 김봉현, 『濟州島 血の歴史: <4·3> 武裝闘争の記録』(大阪: 國書刊行會, 1978)은 4·3폭동에 대한 좌파적 해석을 대표하는 것으로 4·3폭동 이전과 이후의 미군정 경찰과 군대의 제주도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그 결과 야기된 유혈참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J.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980)은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의 4·3폭동의 의미와 한국전쟁 발발의 내부적 요인으로 내전으로서의 4·3폭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있다 (Merrill 1982).

위의 3인의 연구는 4·3폭동의 발발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과정을 다룬 것으로 이 글과 관련하여 4·3폭동의 발발원인과 배경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점곤은 남로당 중앙당이 직접 4·3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데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sup>2)</sup> 4·3폭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2) 회의적인 이유로 그는 남로당이 당으로서의 무장조직은 그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은 배합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또한 남로당의 물리적 능력과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4·3폭동은 남로당의 기본조직과 제주도의 제한된 특수환경, 그리고 미군정과 본토인,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에 대한 경원 등의 조건과 더불어, 3·1절의 민중과 경찰과의 총격 충돌, 그리고 서북청년단 등 반공청년단체에 대한 증오감정 등이 가세된 긴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선동, 조직, 동원하여 이를 교묘하게 남로당의 5·10선거반대·저지투쟁에 합치시킴으로써 폭발된 사건이었다(김점곤 1983:154).

김봉현은 4·3폭동의 원인을 그 전해의 3·1절 시위사건에서 찾고 있다. 즉, 1947년의 제주도민의 3·1절 시위에 대한 미군정 경찰의 탄압과 거기에 대한 도민의 항의, 그리고 이러한 도민의 저항에 대한 미군정과 우익청년단체의 “유혈적인 테러·압살에 의하여 전도의 민중세력은 굴복하든가 저항하든가의 양자택일의 극한선상에 놓이게 되었고”, 여기서 “5·10선거의 실시가 포고되었던 것으로부터 통일을 바라는 애국민인이 분개함”에서 4·3폭동이 시작되었다(김봉현 1978:2-3)고 쓰고 있다.

J. Merrill은 4·3폭동의 원인을 “도민의 뿌리깊은 불만과 저항, 분리주의 전통, 2월 총과업 이후의 (미군정 경찰의) 점증하는 탄압, 그리고(5·10선거에 따른) 정치분위기의 과열”(Merrill, 1980:166)에서 찾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여 1901년 농민봉기의 기억이 2세대 후의 4·3폭동에 근거를 제시하는 혁명적 신호로 작용하였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다(Merrill, 1980:148).

4·3폭동의 발발원인과 배경에 관한 위의 3인의 논의는 4·3폭동에 관한 그들의 논의에서 극히 부분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즉, 김점곤은 당시 제주도의 정치상황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던 미군정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고, 김봉현은 3·1절 시위사건 이후의 도내의 정치상황에 분석의 초점을 둠으로써, 당시 남한의 일반적 정치상황과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4·3폭동의 발발과 관련된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상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을 상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J. Merrill은

---

제주도로부터의 폭동의 ‘복상전략’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김점곤 1983:142-44).

제주도의 저항의 전통 및 미군정의 대한정책의 측면에서 4·3폭동의 원인을 규명해 나간 점에서는 선구적이고 동시에 탁월하나, 제주도의 전통적 민중운동에 대한 분석이 사건 서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일회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그것을 생생하게 재생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으며, 3·1절 시위사건 이후 다음해 2월 총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좌익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좌절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쟁점,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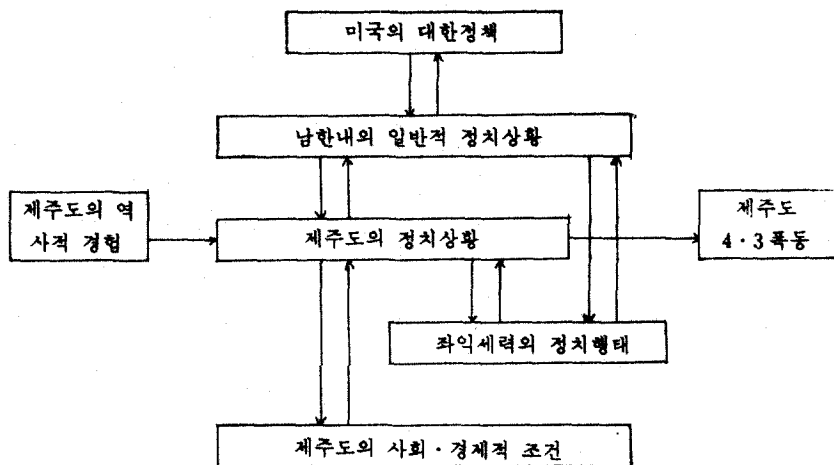
이 글은 4·3폭동의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서 폭동의 발발이라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4·3폭동이 야기한 유혈적 결과를 중시하여, 그 유혈적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 글의 주된 관심분야가 아니다.

이 글은 4·3폭동의 발발 당일에 게릴라들에 의해 살포된 뼈라를 분석하여 연구의 쟁점을 추출함으로써 시작된다. 1948년 4월 3일 게릴라들에 의해 제주도 전역에 살포된 2종의 호소문(김봉현·김민주 1963:84-85)과 그들에 의해 제시된 전술적 구호(앞책 107-108)를 분석하여 보면, 게릴라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① 대국 단선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해방을 달성하고 동시에 '미제'를 축출하고, 그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는 '반미구국투쟁'과 ② 제주도민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제거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이 글은 정치적 측면에서 어떻게하여 게릴라들이 반미의 구호를 제기하게 되었는가에 일차적인 쟁점을 둔다. 즉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의 의도 및 공식이 남한의 정치상황을 일정하게 규정하였고, 또한 제주도에서도 관통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점령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이 남한의 정치사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점령정책이 변화하면서 관통되는 과정 및 그것에 대한 한국 민족의 대응양태, 특히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 및 제주도민의 저항을 고찰할 것이다(제 5 장). 그리고 이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4·3폭동 발발 전의 제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상태를 살펴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치외적인 요인들이 4·3폭동의 발발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는가를 고찰한다(제 4 장). 또한 이 같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뼈에 사무친 원한”이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은 4·3폭동의 발발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제주도민의 저항의 역사 및 좌절의 경험 등을 고찰한다(제 3 장). 한편 4·3폭동의 배경을 고찰하기에 앞서 4·3폭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진행과정을 살펴본다(제 2 장).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연구의 초점과 분석의 영역 및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제 2 장 제주도 4·3폭동의 경과와 특성

### 제 1 절 제주도 4·3폭동의 경과

제주도 4·3폭동의 진행과정을 게릴라의 공세의 양태 및 특징,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미군정 경찰 및 군의 대게릴라작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시기구분을 할 수 있다.

시기구분	시 기	진 행 과 정
제 1 기	1948. 4. 3~5. 15	게릴라 공세 성공
제 2 기	5. 15~8월 말	경비대 대게릴라작전 주도권 장악
제 3 기	9월 초~12. 29	폭동의 유혈화 시작
제 4 기	12. 29~1949. 3. 2	육·해·공 3군의 공격
제 5 기	1949. 3. 2~5. 15	폭동의 일단락
제 6 기	1949. 5. 15~1953. 6월 말	게릴라 재공세 및 무지개부대의 진압

### 1. 제 1 기(1948. 4. 3~5. 15)

이 시기는 게릴라들이 일차적인 공세를 취한 후, 도당대회를 소집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군정 경찰과 점전을 벌임으로써 도내에서의 5·10선거의 실시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둔 시기이다.

48년 4월 3일 한라산에서 하산한 약 500명의 무장게릴라들과 1,000여명의 동조자들은 도내 15개의 경찰지서중 14개소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하여<sup>1)</sup> 경찰, 서북청년단 숙소 및 국민회, 독립축성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요인과 관공리의 집과 행정기관들을 기습 파괴하였고, 다수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살해·납치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83-84).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게릴라 공세의 특징은 경찰과 국방경비대를 뚜렷이 구별하여 경비대에 중립을 호소하고, 경찰 및 우익청년단 만을 공격한 것이었다. 당일 경찰

1) 당시의 경찰 피습상황은 다음과 같다.

#### (一) 제주경찰서 관내

- 가. 화북지서—지서 전소, 경찰관 1명 전사, 지서 사환 1명 피살
- 나. 신임지서—양민 피살 5명, 동 부상 27명, 민가 전소 4동, 게릴라 사살 23명
- 다. 외도지서—경찰관 전사 1명
- 라. 함덕지서—경찰관 납치 2명
- 마. 삼양지서—게릴라 20여명이 내습하였으나 피해 없음.

#### (二) 서귀포경찰서 관내

- 가. 남원지서—경찰관 전사 1명

#### (三) 모슬포경찰서 관내

- 가. 한림지서—경찰관 전사 1명, 동 부상 1명, 양민 피살 1명, 동 부상 1명.

#### (四) 성산포경찰서 관내

- 가. 세화지서—경찰관 부상 6명; 대검찰청 수사국, 『과익사건실록 I』(서울: 대검찰청 수사국, 1965), pp. 376-377.

을 대상으로 살포된 호소문은 역설적으로 게릴라들의 경찰에 대한 공격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때 도내의 행정 및 치안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초기 공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게릴라들은 4월 15일 남로당 도당대회를 소집하여 이후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남로당 중앙당에서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 및 이재복, 강문석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박갑동 1983:199) 이 회의에서 게릴라들은 5·10선거 거부투쟁의 재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4·3투쟁으로 인한 당의 기본조직과 외곽단체의 조직이 깨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투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당과 게릴라, 게릴라와 대중을 분리, 개편하는 동시에 당과 게릴라 및 외곽조직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김점곤 1983:159). 그들은 이 결론에 기초하여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면에서 투철한 사상성 및 풍부한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된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였다.<sup>2)</sup>

게릴라의 기습공격에 놀란 미군정은 4월 5일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한 후 통행증제를 실시하고, 4월 10일에는 부산 주둔의 제 5 연대 제 2 대대(대대장 오일균 소령)을 제 9 연대에 배속하여 경비대의 병력을 증강시켰으며(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8:438) 또한 게릴라들과의 연고가 깊어서 대게릴라전을 효율적으로 치르기에 부적당한 제주도 출신의 경찰 대신에 타도로부터 차출한 1,700여명의 경찰을 최치환을 총지휘자로 하여 파견하였다(김봉현 1978:112). 그러나 경비대는 폭동 발생의 초기부터 도민의 불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진압작전을 추진하지 않았으며<sup>3)</sup> 따라서 타

## 2) 연대편성

1연대—조천, 제주, 구좌면...3·1지대(이덕구).

2연대—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면...2·7지대(김봉현)

3연대—서귀, 남원, 성산, 표선면...4·3지대(?)

이외에 독립대로 특공대(경찰 임무), 특경대(반동 감시 및 자위대 폐단 감시), 그리고 정치소조(게릴라의 사상교양)가 조직되었다. 김봉현, 김민주, 앞의 책, p.88. 한 연구가는 4·3지대장이 조몽구였다고 쓰고 있다(강용삼·이경수 1984:599).

- 3) 예를 들면, 제 5 연대 제 2 대대장 오일균은 대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경찰을 비방하는가 하면, 사건은 경찰과 도민 간의 충돌이기 때



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지리적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야음을 틈타 가해지는 게릴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군정은 당시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에게 게릴라와의 협상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김익렬은 정보참보 이운락을 대동하여 4월말경 구억리에서 게릴라 대표인 김달삼과 3자비밀회합을 가졌다(김점곤 1983:165). 이 협상에서 김달삼은 ① 단선 단정수립 반대 ② 경찰 완전 무장 해제와 토벌대 즉시 철수 ③ 반동 테러단체 즉시 해산과 서북청년단(김봉현·김민주 1963:102) 즉시 철거 ④ 피검자 즉시 석방과 비법적인 검거, 투옥, 학살의 즉시 중지 등의 4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sup>4)</sup>

이 비밀회담 이후로 군·경 간에는 상호불신이 더욱 심화되어갔고,<sup>5)</sup> 이러한 틈을 타서 게릴라들은 5·10선거가 다가오자 재차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세기간 중 게릴라들은 일주도로의 주요 교량을 파괴하고, 통신망을 절단하여 경찰 및 경비대의 연락을 방해하였고, 읍·면 단위로 선거구 위원회,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기습하여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고, 투표소를 소각하며 선거위원과 입후보자를 협박하여 사임케 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106). 이 결과 선거기간 중에 50건의 테모와 소동, 방화 및 우익단체와 그들의 집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였고, 63개 마을과 3개의 관공서가 습격받았으며 우익인사와 경찰가족 20명을 포함하여 게릴라 14명, 그리고 우익인사 14명이 살해되었다(Merrill 1980:171). 그러나 이때의 게릴라의 공세는——경찰의 공세 못지 않게——때때로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이루어짐으로

문에 경비대는 중립을 지키자고 하였다 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438).

- 4) 김익렬은 3자비밀협상의 결과 게릴라측이 무장해제에 동의하고 4월 30일 오후 5시경 김익렬과 미고문관이 입회하여 이를 실시하려는 찰나, 경찰이 불의의 기습을 가함으로써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김점곤 1983:165).
- 5) 군·경 간의 반목은 해방 직후부터 남한에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개재되어 있었다. 즉 경찰은 군이 좌익에 오염되었다고 의심하였고, 군은 경찰이 친일파에 지배되는 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한창원 1984:132-135).

써,<sup>6)</sup> 도민의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게 된다.

선거기간 중 특히 가열된 이 제 1기 동안의 게릴라 공세의 결과 제주도에  
서의 5·10선거는 50% 미만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3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  
의 선거가 무효화되어<sup>7)</sup> 게릴라의 공세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  
된다.

## 2. 제 2기(1948. 5. 15~8월말)

이 시기는 국방경비대 제11연대가 대게릴라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대  
게릴라작전을 활발히 진행하고 반면에 게릴라의 공세는 비교적 약화된 시기  
이다.

48년 5월 4일 미군정은 수원에서 제 2, 제 3, 제 4 연대의 기간요원을 차출  
하여 제11연대를 창설하고, 15일에는 제주도로 이동시켜 도내의 제 9 연대

- 6) 당시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제주도를 담사한 후 게릴라들에 의해 자행된  
무분별한 살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폭도들의 제 1 목표는 살인이다. ...4월 18일 신촌에서는 경찰관의 육순이  
넘은 노부모를 죽이고 목을 자르고 수족을 절단하였고, 그의 가족 2명을 중  
상시켰다. 4월 20일 선흘에서는 임신중인 경찰관의 아내를 죽이되 배를 갈랐  
다. 4월 19일 애월에서는 경찰관의 육촌형을 살해하고 현금 7,800원을 강탈  
하였으며, 대동청년단 지부장을 살해하였다. 4월 22일 모슬포에서 면서기 2  
명을 살해하고 또 경찰관의 부친을 총살한 후에 그 수족을 절단하였다...;  
『동아일보』(1948. 5. 10)(대검찰청 수사국 1965:380-381).

그리고 좌익측 문서도 당시 게릴라들의 '실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김봉현, 김민주 1963:112).

- 7) 선거 무효가 선언된 북제주군 갑, 을 두 선거구의 선거상황은 다음과 같다.  
북제주군 갑구

1. 투표 실시 투표구 31개소, 투표 미실시 투표구 42개소.
2. 등록 유권자 수 27,560명, 투표자 수 11,912명.
3. 임후보자 득표상황—양귀진 3,647표, 김시학 3,479표, 김충희 2,147표,  
문대유 1,693표.

북제주군 을구

1. 투표 실시 투표구 32개소, 투표 미실시 투표구 29개소.
2. 등록 유권자 수 20,917명, 투표자 수 9,724명.
3. 임후보자 득표상황—양병직 3,774표, 박창희 3,190표, 김덕준 691표.;  
USAFIK, G-2 Periodic Report, May 26, 1948, 일월서자(편), 『미군정  
정보 보고서』, 통권 제 6권(서울:일월서자, 1986), p. 79 이하 등보고서  
의 인용은 G-2 Report, 보고날짜, 일월서자, 통권호수, 페이지로 줄여서  
표기함.

1개대대 및 여기에 배속되었던 제 5 연대 1개대대를 제 11연대에 흡수, 통합하고 연대장에는 일본군 재적시 종전 말기에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어 제주도의 지리에 능통한 박진경을 임명하여 대게릴라작전을 담당하게 하였고(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0), 동시에 5월 18일에는 타도 경찰병력을 철수 시킴으로써, 경찰의 병력을 축소시켜 해안지대의 경비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결과 대게릴라작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위의 책 442).

박진경은 김달삼과 재접촉을 시도하여 투항하라고 협상을 벌였으나, 김달삼의 거부로 실패로 돌아가자, 5월 말부터 적극적인 대게릴라공세를 전개하였다. 박진경의 대게릴라작전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처음 전략contacts를 건립한 후, 광범위한 소개작전을 펼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게릴라와 그 혐의자를 수색한다는 것이었다(Merrill 1980:175). 박진경의 이러한 작전은 그 결과 600명 이상의 남로당원 혐의자를 채포하는 등의 전과를 기록하기도 하나(Merrill 1980:175) 때때로 게릴라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sup>8)</sup> 그 결과 경비대원 40여명이 탈주하여 게릴라측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 박진경은 6월 18일 게릴라측에 의해 암살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0).

박진경이 암살되자 미군정은 후임에 최경록을 임명하여 암살사건의 전모와 연대내의 좌익 계보를 파헤쳐 사실상의 제 1 차 숙군을 단행하고(위의 책

8) 후에 박진경 암살범으로 재판정에 선 손선호 하사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한다.

박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은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작전에 비하여……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에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본 박대령은 무조건하고 그 아이를 쏘아 넘어 뜨렸다……그밖에 부하들과 사격 연습을 한다고 부락의 소나 돼지를 함부로 쏘아 넘어뜨리고, 폭도가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서 만약에 폭도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여 버렸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폭도를 채포하여야 한다는 등, 그는 부하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도 없었다; 정동용, “동란 제주의 새비극: 박대령 암살범 재판기”, 『새한민보』, 2권 16호(1948년 10월 상순), p.30.

441), 7월 10일에는 대구 주둔의 1개대대 830명(대대장 이철원 대위)을 제주도에 증파하여 제11연대를 완전 3개대대로 편성하였고, 곧이어 7월 15일에는 제11연대에서 본래의 제 9연대 병력을 배속 해제하여 9연대를 재편성하고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 송요찬 소령을 임명한 다음, 7월 24일 제11연대를 수원으로 철수시켰다(위의 책 442). 새로이 대게릴라 작전의 지휘권을 부여받은 송요찬은 제 6연대 350명의 병력을 보강받고, 1개월동안 부대정비를 한 다음 게릴라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위의 책 442-443).

경비대의 본격적인 공격에 직면한 게릴라들은 처음 도처에 “경비대 환영”이라는 표어를 붙이고, 경비대와의 적대행위를 극력 회피하면서 경비대의 중립을 호소하였으나(위의 책 440) 결국 경비대와의 교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박진경의 암살을 모의하여 마침내 제 9연대내의 남로당 세포인 문상길의 공작에 의하여 박진경을 암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당시 게릴라의 활동은 축소되어 있었으며, 특히 6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게릴라들은 전략을 장기항전으로 전환하고 그 태세를 갖추게 된다.

게릴라들이 공세를 완화하고 장기항전 태세로 들어간 이유는 첫째 정부군의 공세가 상대적으로 강력했고, 때마침 도래한 장마가 게릴라의 전의를 약화시켰으며,<sup>9)</sup> 보다 중요하게는 남로당이 중앙집중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8·25 지하선거의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sup>10)</sup> 그리고 이때 김달삼, 강규찬 등 게릴라의 주요 지휘관 6명이 8월 20일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떠남으로써, 게릴라의 지휘권에 변화가 생겼던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이후 게릴라부대의 지휘권은 김성규가 담당한다(대검찰청 수사국 1965:378).

### 3. 제 3기(1948. 9월초~12. 29)

9) FEC, *History of U.S. Army Forces in Korea*, part 3, p.18, J. Merrill, 앞의 논문, p.176에서 재인용.

10) J. Merrill, 앞의 논문, p.176, 한편 게릴라들은 경찰, 경비대의 공세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군 철수 지연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세를 완화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G-2 Report, July 15, 1948, p.198.

이 시기는 송요찬에 의한 본격적인 대게릴라작전이 재개된 후,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여기에 배속될 예정이었던 여수 제14연대에 의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군과 게릴라 간의 접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그 결과 대규모의 유혈참사가 시작된 시기이다.

약 1개월 간에 걸쳐 부대를 정비한 송요찬은 48년 9월초부터 대게릴라작전을 재개하였다. 송요찬의 작전은 제11연대가 수립하였던 작전개념을 계승한 것으로서, 토끼몰이식 수색작전과 적격심사위원회활동의 강화 및 귀순공작의 개시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3).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정부는 10월 8일 제주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부만근 1975:457) 10월 11일 김상겸 대령을 사령관으로 한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제 9 연대 1개대대, 제 6 연대 1개대대, 제 5 연대 1개대대, 해군 함정 및 제주경찰대(대장 홍순봉 경무관)를 통합 지휘하게 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3). 이때 제주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될 예정이었던 여수 제14연대가 승선을 거부하고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킴으로써(김점곤 1983: 188-204) 상황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가기 시작했다.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함으로써, 4·3폭동은 여순반란사건과 더불어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여순반란사건이 일단락되자, 4·3폭동의 진압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정부는 고조된 반공주의 감정에 힘입어 제주도의 게릴라에 대한 무제한의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Merrill 1980:182). 그 결과 11월 3일에 200명의 게릴라의 주력군이 살해된 것을 비롯하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5) 11월 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1,625명의 게릴라가 살해되었고, 1,383명의 게릴라가 체포됨으로써<sup>11)</sup> 폭동은 이제 유혈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폭동의 유혈화는 본토로의 이동에 즈음하여 전공을 높이려는 제 9 연대의 12월초부터의 최후 공세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G-2 Report, 1948. 12월 7일 p. 563). 이 시기에는 특히 양

11)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History of the Korean Army*, 1 July to 15 October 1948, p. 2, J. Merrill, 앞의 논문, p. 183에서 재인용.

민이 많이 학살되어 12월 중순경에는 단 일주일 사이에만 630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전해진다(Merrill 1980:184).

9월초부터 정부군의 공격에 밀리던 게릴라들은 산중에서 조직과 전비를 강화하고 소련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도순리와 오동리의 경찰지서를 습격함으로써 공세를 재개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3). 여순반란 사건은 한편으로 게릴라들을 고무시켜, 그 결과 게릴라들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10월 24일 당시 게릴라의 총책임자 이덕구는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였고(김봉현·김민주 1963:165) 또한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정부군 및 경찰에 대하여 살포하여 심리전을 전개해 나갔다.

친애하는 장병, 경찰원들이여!

총뿌리를 잘 살피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의 피,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총뿌리를 당신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 앞에 쓰지마라! 귀한 총과 총탄을 허비말라! 당신네 부모, 형제, 당신들까지 지켜준다. 그 총은 총 입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의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 쫓겨 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악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뿌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인민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나라, 내집, 내부모, 내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 인민의 명예로운 자리를 지키라(위의 책 166).

이 당시 게릴라들의 활동 및 자신감은 북한기를 공공연히 게양할 정도에 까지 이르러(G-2 Report, 1948년 10월 25일, p. 414) 한때 정부군을 수세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정부군이 11월초부터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재공세를 취하게 되자 게릴라들은 다시 수세에 처하게 되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기도가 발각되는 등(G-2 Report, 1948

년 11월 3일, p. 432),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게릴라 주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잔존세력은 1개대대 약 300명으로 축소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4).

#### 4. 제 4기(1948. 12. 29~1949. 3. 2)

이 시기는 정부군의 교체를 틈타 게릴라의 공세가 한때 활기를 띠었으나, 제 2연대의 육·해·공군 연합작전에 의한 반격작전을 당하면서, 게릴라의 세력이 더욱 약화되어 가던 시기이다.

이덕구가 지휘하는 게릴라세력은 제 9연대와 교체된 제 2연대가 48년 12월 29일 도착한 후 경제가 소홀했던 기회를 이용하여 49년 1월 1일 오동리 화염사에 배치된 제 3대대에 대하여 기습공격을 가한 것을 시작으로(위의 책 445), 1월 8일 제주도청을 방화 소각하고, 삼양지서를 공격하는 등(위의 책 446), 군교체의 혼란을 틈타 공세를 강화해 나갔다.<sup>15)</sup>

그러나 게릴라들의 이러한 공세도 정부군에 의한 육·해·공군 연합작전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함병선 중령이 지휘하는 제 2연대의 1개대대 병력이 여·순반란군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48년 12월 5일 복귀하자, 제주도로의 이동을 명령하였고, 그 결과 제 2연대는

15) 게릴라의 이 당시의 활동을 평양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고 전해진다.

제주도에서의 인민유격대의 활동이 이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평양에 전해진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1월 16일, 17일 이전에 표선 지역에서 유격대에 의해 개시된 공격에 의하여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1월 12일, 13일에 유격대는 경찰, 군대 및 청년단의 연합병력을 유인하여 포위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1월 16일에 유격대 진압의 임무를 띠고 대정 부근의 산으로 올라간 경찰은 매복하고 있는 유격대에 의하여 진로를 바꾸어야 했다. 한편 같은 날 모슬포 근방에 출현한 유격대는 수많은 악질 관리와 테러 분자를 숙청했다. 1월 24일 유격대는 표선리의 경비초소를 공격하여 파괴했다. 1월 21일 유격대는 애월면 가시리를 공격하여 4명의 악질지주와 5명의 테러분자를 숙청하고, 경찰을 공격하여 3명을 생포하고 9명에 부상을 입혔으며, 동시에 대동청년단과 민보단 사무실을 제로 만들어 버렸다. 같은 정보에 의하면 같은 날 애월면 하귀리에 출현한 유격대는 수많은 악질분자를 숙청했고, 마을 주민들도 유격대에 호응하여 한국민주당의 사무실을 불태웠으며, 이러한 공격에 놀란 경찰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 Radio P'yongyang, Feb. 1, 1949, J. Merrill, 앞의 논문, pp. 186-187에서 재인용.

12월 29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 9 연대의 작전을 인수하였다(위의 책 444). 12월 31일 제주도 지구의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제 2 연대는 49년 1월 4일부터 육·해·공군 연합작전을 실시하였다. 즉 해군에서는 18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정부군 및 경찰대의 수송과 보급문제를 원활히 하고, 동시에 제주도 연안에 대한 완전봉쇄를 취하여 소속불명의 선박나포와 게릴라들의 해상 탈출을 차단하며 37밀리 포로 위협사격을 가하는 작전을 담당하였고, 공군에서는 날개에 2·36인치 로켓 2문을 장치한 L-5형 연락기 6대가 출동하여 경찰, 전단살포, 지휘관 수송, 지상군 인도, 수류탄 및 폭탄 투하작전을 담당하였다. 또한 동시에 육군은 대전차포, 박격포, 0.5인치 기관총, 로케트포, M<sub>1</sub>소총 등으로 새로이 무장하여 게릴라 진압작전을 강화해 나갔다(위의 책 445).

이와 같은 육·해·공군 연합작전은 게릴라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때로는 이전과 같이 무문별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었다.<sup>16)</sup>

또한 해군함정에 의한 위협사격은 해안에서 한라산까지 4km이내의 촌락을 초토화시켜, 그 결과 도민이 산중으로 피난하여 게릴라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선무공작을 개시하여 약 15,000명을 하산시켜 수용하고, 동시에 주택건설, 구호물자 배급 등의 복구사업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5).

##### 5. 제 5 기(1949. 3. 2~5. 15)

이 시기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게릴라에 대한 진압을 일단락짓고, 그 결과 제주도에서의 재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부의 통치력이 회복되어 가던 시기이다.

제 2 연대의 육·해·공군 연합작전에도 불구하고, 49년 봄까지 게릴라들

16) 이 당시 제주도를 시찰 중인 미국 고문단은 1월 25일 M<sub>1</sub>소총으로 수차례 확인 사살된 973구의 남녀 및 어린아이의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한 2월 20일 도두리에서 경찰 감독하에 즉창을 든 우익청년단원들에 의해 자행된, 5명의 여자와 중학생 정도 연령의 수많은 소년이 포함된 76명의 부락민에 대한 처형을 고발하고 있다(J. Merrill, 1980:186).



의 활동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사령관에 유재홍 대령, 동 참모장에 함병선 중령을 임명하고, 김용주 소령의 독립유격대대를 투입하여 적극적인 대게릴라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위의 책 446). 유재홍은 정부군을 한라산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한편으로는 3월 25일 기한의 사면계획을 발표하는 선무공작과, 한편으로는 게릴라에 대한 강력한 무장진압의 2단계 작전을 구사하였다(Merrill 1980:189)<sup>17)</sup>

이 결과 사면기간 동안 매일 약 100명 이상의 게릴라 및 게릴라 동조자가 투항하여,<sup>18)</sup> 이러한 투항자들에 의해 게릴라측의 작전정보가 누설되고, 어승생악의 지하동굴에 감추어진 게릴라의 병기창과 보급창의 위치가 알려지는 등(국방부전신편찬위원회 1969:446-447)의 손실을 겪으면서 게릴라세력은 더욱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게릴라세력은 사면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4월 12일까지의 유재홍 부대의 본격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거의 게릴라 지경에 이르렀다. 즉 유재홍 부대의 공격기간 중에 2,345명의 게릴라가 살해 혹은 부상당했고, 1,668명의 민간인이 실종되었으며, 동시에 3,600명의 게릴라동조자가 생포되어(Merrill 1980:189-190) 게릴라세력은 4월 중순경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위의 논문 191).

이와 같이 게릴라세력이 약화, 소멸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통치력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4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내도하여 약 2,500명의 생포자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귀경한 다음, 48년에 실시되지 못한 복제주

17) 당시의 정부군의 대게릴라작전의 한 예를 한국전쟁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 2대대 제 6 중대장 이동준 중위가 그의 중대를 반도들로 가장하고, 그들의 활동에 침투하여 이곳 주민 700여명을 국민학교에 집합시켜 일장 연설하기를 “우리 인민유격대는 김일성 원수의 지령하에서 영웅적인 인민해방투쟁을 하는 동무들을 돕기 위하여 잠수함을 타고서 상륙하여 왔다.” 이렇게 서두를 내걸고 연설하는데 나중에는 전후가 모순된 말이 나오게 되어 가장한 것이 폭로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대 주력이 외곽지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자는 사살하고, 이들을 모두 연행 조사하여 처리하였다”(국방부전신편찬위원회, 1969:447-448).

18) USAFIK, G-2 Periodic Report, March 17, 1949, J. Merrill, 앞의 논문, p.189에서 재인용.

군 감구, 울구에 대한 재선거가 5월 10일 실시되고<sup>19)</sup> 5월 15일에는 제주도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어 독립 제 1대대(대대장 김용주 소령)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의 본토로의 철수가 이루어진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8).

#### 6. 제 6 기 1949. 5. 15~1953. 6월말)

이 시기는 잔존 게릴라세력이 암약하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정부에 대한 재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육군 특수부대의 반격으로 몰락한 시기이다.

제주도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제 9 연대 탈주병 고성구, 김성규 등의 잔존 게릴라세력 100여명은 계속 암약하면서 독립 제 1대대 및 후에 교체된 해병대와 때때로 교전하기도 하였으나, 산악 깊숙히 침투하여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위의 책 448).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기에 고무된 게릴라 80여명은 1952년 여름에 제주방송국과 서귀포수력발전소 및 군훈련야영지를 습격하는 등의 공세를 취하여(Merrill 1980:193) 한때 수개월간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게 된다.<sup>20)</sup>

게릴라의 습격을 당한 정부는 잔존 게릴라의 완전 소탕을 결의하여, 김원용 총경을 사령관으로 하는 경찰 6개대대 병력의 제100경찰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한창수 1984:236) 대게릴라작전에 나섰으나 경찰력만으로는 대게릴라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자, 53년 1월 29일 박창암 소령이 지휘하는 총원 86명의 육군 특수부대(일명 무지개부대)를 투입하여 적극적인 대게릴라작전을 전개하고, 그 결과 5개월만에 게릴라세력은 완전히 소멸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9:448-451).

### 제 2 절 제주도 4·3폭동의 의의

제주도 4·3폭동의 경과를 고찰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4·3폭동이 야기한 대규모 유혈참사에 놀라게 된다.

19) 위의 논문, pp.191-192. 이 재선거의 결과 감구에서는 홍순녕이, 울구에서는 양병직이 당선되었다. 당시 후보자 및 그들의 득표수는 강용삼, 이경수, 1984:624를 참고하라.

20) Edgar S. Kennedy, *Mission to Korea* (London: Derek Verschoyle, 1952), p.122, Merrill 1980:193에서 재인용.

4·3폭동 발발 초기의 인명 피해상황을 보면, 발발 당일에는 게릴라와 경찰을 포함하여도 사망인원 34명, 부상인원 25명, 피납인원 2명에 불과하였고, 제 1기 공방전이 끝난 직후 발표된 미군정 경무부의 자료 및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의 자료에 따르면이라도 사망인원 42명~162명, 부상인원 98명~110명, 납치인원 8명~299명에 지나지 않던 인명 피해상황이<sup>21)</sup> 폭동 말기에 이르러서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인명 피해상황이 너무나 엄청났던 관제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최소 4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론될 뿐이다. 즉 정부측이 제시한 자료만 해도 『한국편람』(1956년)에는 4만명이,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건의안』에는 5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김봉현 1978:322) 1963년 제주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 제 8 호에는 80,0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22)</sup>

21) 위의 피해상황 중 최소수치는 경무부 자료를 계산한 것이고, 최대수치는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의 자료를 계산(인민재판을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① 경무부 발표 피해상황(게릴라 제외)

- i) 습격전수—경찰관서 23, 경관 24, 관공서 6.
- ii) 테러전수—경관 13, 경찰가족 4, 관공리 6, 민간 84.
- iii) 납치인원—경관 3, 경찰가족 1, 관공리 1, 민간 3.
- iv) 사상인원—경찰 사망 13, 부상 62.

민간 사망 27, 부상 31.

관공리 사망 2, 부상 5, (이하 줄임).: 김봉현, 김민주, 앞의 책, p.100.

②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 피해상황

- i) 습격—경찰관서 35, 경찰관 8, 관공리 3, 선거사무소 18.
- ii) 납치—경찰관 4, 경찰관가족 4, 관공서 2, 양민 289.
- iii) 행방불명—경찰 2.
- iv) 사망—경찰관 23, 경찰가족 13, 관공리 3, 폭도 119.
- v) 인민재판—관공리 2, 반동분자 2.
- vi) 부상—경찰관 29, 경찰관가족 2, 반동분자 65, 관공리 6, 폭도 8. (이하 줄임); 『조선중앙연감』(1949), p.219, 김정근, 1983:168-169에서 재인용.

22) 전과와 피해상황

- i) 공비출몰수—72,576명
- ii) 전과—사살 7,895명, 생포 7,061명, 귀순 2,004명, 계 16,960명
- iii) 피해—인명피해 80,065명, 관공서 피습 및 소실 228동, 학교(교실) 소실 224동, 피해부락수 160부락, 피해호수 15,228호, 피해동수 35,921동,

한편 4·3폭동은 조직적 투쟁으로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초로 발생한 반미 무장투쟁으로서 J. Merrill은 4·3폭동을 평가하여 “2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적 구조를 재부과하려는(제국주의 국가의) 시도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한 갈래”라고 쓰고 있다(Merrill 1980:196-197). 이러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반미 무장투쟁에 직면한 미군정은 처음 당황하여 폭동의 성격 및 그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sup>23)</sup> 따라서 그 대처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보다 명료해져자 미군정은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의 구축”이라는 대한정책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점이 폭동의 유흔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4·3폭동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이후의 남한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3폭동은 남한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최초의 군사적 도전(Scalapino & Lee 1972:307)으로서 이후 남로당으로 하여금 무장유격투쟁 전술로의 이행을 촉진케 한 주요한 계기를 이루는 사건이었다(김남식 1984:363). 4·3폭동은 이와 같이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여 새로운 통치질서의 수립에 부정적인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여순반란사건과 더불어 군부에게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을 단행하는 서막을 제공(김점곤 1983:200)하는 동시에 대

(이하 줄임); 김인화,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구 상황 : 2차년도 의 사업계획”, 『제주도』 제 8 호 (1963), p. 38.

- 23) 당시 미군정의 점찰총장이었던 이인은 4·3폭동의 성격을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다는 것과 관공리가 부패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여 “관공리의 인적 개편을 단행”함이 사건의 해결에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세한민보』 2권 13호(1948년 7월 상·중순), p. 11.

또한 4·3폭동 초기의 진압군 총지휘자였던 브라운 대령은 “사건의 원인은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고 언명하고——인종적 우월감의 소산이었기도 하겠지만——“사건도 본관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약 3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해진다.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3권 6호(1948. 7), pp. 87-90.

- 24) 물론 여순사건 이후 4·3폭동 진압의 주도권은 한국정부에 넘어 갔으나, 그렇다고하여 미국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은 여전히 고문자적으로 한국정부군을 통제하고 있었고, 로버트 준장이 진압작전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김봉현, 김민주, 앞의 책, p. 173ff.

게릴라투쟁의 경험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후의 남로당의 무장유격투쟁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신감 및 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제 3 장 제주도 4·3폭동의 역사적 배경

#### 제 1 절 조선 말기의 제주도 농민운동

18세기와 19세기의 초기부터 조선사회는 농업, 상공업, 사회신분 등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그에 따른 농민층 분해의 촉진, 상업, 수공업, 광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그리고 이같은 농업, 상업, 공업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른 봉건적인 신분제의 붕괴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정석중 1981:291-304) 조선 사회를 근저에서부터 동요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위기, 동요의 총체적 표현인 민란은 이 당시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점증해 가고 있어 조선사회의 해체를 재촉하였다.<sup>1)</sup>

조선사회의 위와 같은 내적 모순은 1876년의 개항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탈에 직면하여 더욱 격화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에 둘러싼 자본주의 국가들의 조선침탈방식은 크게 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 이미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던 구미 자본주의국가와, 이에 대항하여 자국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시적 축적을 감행하고 있었던 일본, 중국 등의 후발 자본주의국가의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후자는 처음부터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압박을 강하게 가해, 원시적 축적 단계 특유의 노골적인 폭력성을 노정하고 있었다(樗村秀樹 1983:68-69). 그리하여 이러한 제국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침투는 조선 말기 끊임없이 성장해 왔던 내재적 발전을 위축·

1) 예를 들면, 최진옥은 한 연구에서 1862년 한해에만 도합 37회의 민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박광성은 1862년부터 1894년까지 도합 47회의 민란이 빈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것은 최진옥, “1860년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pp.386-388 및 박광성, “고종조의 민란연구”,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pp.475-480을 참고하라.

변질시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은 제주도에도 일정하게 관찰되었으나 그대로 관찰되지는 않았고, 일정하게 변용되어 특수한 모습을 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경지면적의 절대적인 부족과 경지의 척박, 그리고 원시 농업의 답습은 지주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도민은 대개 같은 경제적 조건을 가진 자작점 소작농으로서 농민층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열악한 조건아래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도민은 한편으로는 어업이나 수공업 등에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목장토 및 화전 등의 국유지의 경작과 관방전 및 아문둔전 등의 공토의 경작 등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세 및 화전세 등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더구나 이것은 점점 인상되어 도민을 다시 궁핍케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국가 지주제를 통한 관의 봉건적 수탈은 19세기 후반에 가중되었다. 한편 제주도에는 경지의 대부분을 밭이 차지하고 있었고, 밭은 기후 등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굴 등의 특용작물의 재배와 목축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특용작물 및 말 등은 그 대부분이 현물지대의 형태로 공납되었으며, 이 공납에는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에 의한 자의적 수탈이 자주 자행되어 도민을 특히 고통스럽게 하였다.<sup>2)</sup> 이러한 상태에서 도민은 생계의 보조수단으로서 미역·전복 등의 해산물과 양태 등의 수공업생산물을 통하여 충청·전라도 지방의 내륙상인에게서 식량과 포목 등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주도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진봉 1981:413-414).

2) 이상의 논의는 강창일, “1901년 제주도 민란에 대하여 : 한말 천주교의 성격과 관련하여”(미간행 1984), pp.15-20에 의한 것임. 한편 굴 등의 특용작물 및 말 등의 공납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 상황은 김봉현, 『제주도 역사지』(대관 : 교문사, 1960), pp.169-180을 참고하라. 특히 말의 공납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했는데 이 점은 남도영,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 : 한국 목축업 연구의 일단”,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4집(1969.6)을 참고하라.

한편 조선의 개항 이후 제주도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직접적이고 약탈적인 어장침투와 천주교의 전파를 통한 선진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강요가 이루어져 제주도민을 압박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이고 약탈적인 어장침투는 제주도의 반농반어적 생활권을 침식하여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였고, 이전부터 봉건적 수탈에 신음해 오던 도민은 거기에 더하여 일본의 어업침탈이라는 외압에 직면하게 되자 생존을 위한 대응 방략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강만생 1986:102). 또한 프랑스에 의한 천주교의 전파는 구래의 제주도의 내적 모순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제주도민을 억압하였고, 이 결과 제주도민의 완강한 저항운동을 야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제주도에서는 19세기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도합 6차례의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된다.

19세기 제주도에서의 최초의 농민봉기는 1813년에 발생하였다. 이 농민봉기는 제주도 중면의 풍헌 양재해를 위시하여 김익강, 고덕호, 강필만 등이 동년 12월 6일 밤에 봉기하기로 모의하다가 윤광종의 밀고로 폭로된 사건이었다(김봉현 1978:235). 양재해는 1811년 평안도에서 농민전쟁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세도정치 폐해와 지방차별대우에 대해 봉기, 항쟁 하여야 하며…… 제주도는 반드시 제주인이 자립하여야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서 관리들과 서로 계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비밀히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역사를 모집하며 병기를 제조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어 목사와 판관 및 정의현과 대정현의 양 현감을 죽이고 전도를 점령하여 해상로를 봉쇄한 다음 “자치하고 자주”할 음모를 진행하였으나 거사 10여일 전에 윤광종의 밀고로 50여명이 체포됨으로써, 봉기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김태능 1968:152). 이에 놀란 정부는 다음해 정월에 찰리어사 이재수를 보내어 양재해 부자를 빼고, 나머지는 해도로 귀양을 보내었으며, 목사 김수기는 죄인 7명을 바로 죽였다하여 파면하였다(김석익 1976:426-427). 한편 이재수는 도민의 실정을 조사하여 민폐사항과 민생문제에 관해 개선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공물 및 선세, 미역세 문제 등이 당시 제주도민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김태능

1968:153-154).

결국 이 사건은 풍천 등이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한 상층농민에게 주어졌던 향적이고, 이들은 조선 말기의 신분제의 붕괴에 편승하여 계속적으로 신분향상을 추구하였음을(김용섭 1984:205-210) 생각할 때, 양재해 등이 자신들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도민의 불만 및 특히 도민의 독립주의 의식과 교묘히 결합시켜 봉기를 모의해 나갔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한 때 잠잠하던 제주도에서는 1862년 삼남지방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의 농민봉기와 때를 같이하여 다시 봉기가 촉발되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는 세도정치와 정치기강의 문란에 따른 폐단, 삼정문란에 따른 농가경제의 파탄과 신분의 동요, 그리고 반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자극받아 농민봉기가 극심하게 빈발하고 있었는데(최진옥 1981; 박광성 1969), 이때 발생한 제주도의 농민봉기는 3차에 걸쳐 일어났을 정도로 특히 그 봉기양태가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막대하게 가져왔다(김진봉 1981:416)는 점에서 현저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사건은 처음 화전세의 과다집복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시작되었다(위의 논문 416-426). 특히 화전세의 과다집복 문제는 화전민이 많이 살고 있었던 대정현에서 가장 심각하였던 바, 대정현 일대 약 1,000여명의 화전민들이 장환과 조만송의 지휘에 따라 9월 12일부터 감관과 색리의 집을 부수고 집복문서를 불태우는 등의 거사를 단행하고, 목사의 객사 앞에서 진정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목사는 영이방과 감색의 불법처사를 인정하고 화전민들이 제기하였던 화전세의 과다집복 문제 및 기타 군포의 과징문제 등의 폐해를 모두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9월 18일 화전민들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전세의 재집복이 진행되자 제주 3읍민 1만여명은 강제점의 지휘하에 제반 폐해의 시정을 요구하며, 10월 6일 제주성을 공격함으로써 2차 봉기가 발생하였다. 제주 3읍민 1만여명은 패랑이를 쓰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성내에 잠입한 다음 평소에 지탄을 받아오던 요민의 집을 부수고, 대표적인 부정관리 김종주, 송



응환, 송인원, 김석룡, 김형량 등의 5인을 직접 타살해야 돌아가겠다고 버티었다. 한편 성내에서 파괴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동안 조천, 북포, 함덕의 동리사람들을 충청도에서 쌀·소금·포목 등을 싣고와서 제주에서 교역을 하던 무역선을 공격하여 그 선적물을 모두 탈취하였고, 또한 목사가 본댁에 보내려고 하던 물건들을 바다에 쳐넣어 버렸다. 이와 같이 사태가 현악해지자 목사가 직접 나와 부정관리 5인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이에 5죄인을 잡아 가두니 군중이 비로소 해산했다.

2차 봉기후 다시 농민봉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목사는 도민을 위문코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가운데, 11월 15일 수만명의 도민이 다시 봉기하여 평소 원성을 받아 오던 부호의 가옥을 부수고, 17일에는 제주성내에 물러들어가 목사를 축출하고 부정관리를 색출·타살함은 물론 제주목의 여러 일을 마음껏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12월 9일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3차 봉기의 양태는 목사의 축출, 병부·인신의 탈취기도, 다수의 인명살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것은 내륙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한 것이었다.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렇게 3차례나 발생하였던 봉기도 마침내 도민의 자제로 종식되는 바, 정부에서는 전 목사 임헌대를 함경도로 귀양보내고, 새로이 정기원을 목사로 임명하여 사건의 관련자를 처벌케하고, 이견필을 안핵사 겸 찰리사로 임명하여 도민을 위무하게 하였다. 이에 정기원은 부정관리를 처벌하고 또한 봉기의 주동자인 강제견과 김홍채를 효수하였으며, 이견필은 도입하여 기타의 봉기 가담자를 처벌하는 등 제주봉기 수습의 전책임을 지고 활동하였다(위의 논문 428-430). 이견필은 후일 귀경하여 국왕에게 제주도의 민폐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화전세의 과다집복 외에 평역의 과다징수, 장세의 과다집복, 그리고 말의 공납문제 등이 제주도민의 원성을 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위의 논문 427-428).

한편 조선이 개항한 이후, 제주도는 일본어민의 어장침탈을 겪게 되었다. 일본어민이 제주도어장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79년 이후의 일로서(한우근 1971:7) 이것은 조·일통상장정 및 조·일통어장정 등의 불평등 조

약이 체결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어갔다. 더구나 이러한 일본어민의 어장침탈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도둑질, 강간, 살인 등의 만행이 부수되기도 하는 등 약탈적, 폭력적 성격이 농후하였는데(박구병 1974:417-419; 강만생 1986: 103-114) 이것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강제적 창출이라는 일본 자본주의 조건속에서 파생된 조선침략의 특질을 이룬다 하겠다.

이러한 때에 마침내 제주도에서는 순변관 이진이 제주도에 도착, 체류하던 1891년 3월 20일 일본어민의 제주도에서의 통어를 영구히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봉기가 발생하였다. 도민들은 순변관의 거처에 일제히 돌입하여 순변관을 구타하고 강제로 배에 태워 보냄으로써(한우근 1971:28-29) 도민의 불만을 강력히 표현하였다. 1891년 봉기는 일본어민의 어장침탈과 그것에 대한 조선정부의 무기력한 대응<sup>3)</sup>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던 것이었으나, 여기에는 봉건정부와 어세를 징수하여 관에 납부하고 해산물 매매권을 독점함으로써 특권적 지위를 쌓아가고 있던 포주인에 대한 저항도 내포되어 있었다(강만생 1986:127-128).

1890년대에 이르면서 봉건적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이러한 모순의 심화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고양되었던 갑오농민전쟁이 제국주의의 개입에 의해 좌절된 이후 조선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갑오개혁도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앞에 크게 굴절되고 있었다. 즉 지방관제의 개편 및 조세의 금납화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와 정치적 지배를 쉽게 함과 동시에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수취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었다(박종근 1985:249-306).

이러한 개혁의 내용은 제주도에도 관철되어 가는바, 원래 제주도에서는 1892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이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으로 개편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에 다시 칙령 제98호의 '지방제도의 개정'에

3) 한 연구가는 일본의 어장침탈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의 인식이 부족하여, 오로지 도민의 작요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일본정부의 선처에 호소하였다"고 쓰고 있다(강만생, 1986:119). 당시 제주도 어채문제에 관한 조선정부의 일본과의 교섭과정은 현계순(1964), 이원순(1967:159-167).

의하여 제주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목사를 폐지한 다음 관찰사를 두어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의 3군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경무청을 신설하고, 제주, 대정, 정의에 군수를 두어 관찰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한동구 1975:278-279). 이와 같은 지방관제의 개편은 을미사변 및 단발령의 강제 실시를 발단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투쟁에 호응한 제주도민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1896년에 제주도민은 개편된 지방관제가 제주도를 격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청을 향하여 시위를 단행함으로써 신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부사가 이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자(위의 책 279)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부사의 탄압에 격앙된 수천의 제주도민은 유생 강유석, 송계홍 등을 선두로 하여 “신개혁안 반대”, “왜적 격멸”, “매국역적 소탕”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경무청 등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공문서를 소각함으로써 신제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김봉현 1978:265). 이러한 도민의 봉기는 비록 전 부사 김윤병과 대정군수 채구석의 거병으로 진압되었으나(한동구 1975:280),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정부는 신제를 폐지하고 구제로의 환원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1896년 7월에 관찰사가 폐지되어 목사부로 환원되었고 경무청 및 참서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평역미와 제초의 공납이 폐지되는 대신에 동포가 신설되었다(김석익 1976:448).

한편 갑오개혁에 따른 조세의 금납화는 차츰 제주도의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이러한 상황은 호주세, 어장세, 시장세 등의 무명잡세의 강제 징수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김봉현 1978:266-267).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어장침탈은 남획에 따른 제주도의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라 많이 둔화되어 있었으나(이원순 1967:170), 여전히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저해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적 수취체제의 강화 및 일본 제국주의의 어장침탈에 따른 도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가는 때이던 1898년에 이르러 제주도에서는 또 다시 농민 봉기가 발발하였다.

소위 ‘방성칠의 난’이라 불리우는 이 농민봉기는 남학당이라는 비밀결사

에 의해 주도되었고, 제주도민의 독립주의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봉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이 농민봉기의 지도주체는 남학당으로서, 이것은 갑오농민전쟁에 참가했다가 뒤에 제주도에 이주하여 화전경작으로 살아왔던 전라도 동북군 사람인 방성철이 함께 이주해온 순수화전민을 규합하여 만든 종교적 비밀결사였다(강창일 1984:24)고 한다.

방성철 등은 처음 당시 화전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화전세와 장세의 감봉을 제주목사에게 정소하였고, 목사가 이에 농민의 요구는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일단 해산하였다. 그런데 목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병정을 모집하여 농민의 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하려하자, 남학당은 이에 대응하여 2월 말에 3군으로 통문을 돌려 매호당 1인씩 참가시켜 수만명을 소집한 후 제주성으로 진격하여 제주성을 함락시켰다. 제주성이 함락된 후 방성철은 3읍 군수를 파직하고, 군고를 부수어 무장을 갖추는 한편 화전민 가운데 용맹한 자를 선발하여 성안을 방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열을 정비한 이후 그는 “국운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곳 제주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도민들의 독립주의 의식을 부추기면서 봉건적 지배통치기구를 부정하고, 외부로부터 유배된 적객에게 관직을 주는 등 통치기구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방성철의 이러한 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 이하의 관리, 유배 적객 및 토호세력의 반격에 직면하여 무산되고 만다. 목사 등은 방성철이 일본으로의 복속을 원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농민봉기군의 내부를 교란하기 시작하였고, 창의군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을 모집한 후 봉기군을 공격함으로써, 이 결과 정소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독립운동으로까지 발전했던 이 농민봉기는 내부의 갈등과 창의군측의 공격에 의해 50일만에 진압되었다(위의 논문 24-28).

‘방성철의 난’이 진압된 후 다소 진정되는 듯 하던 제주도의 분위기는 3년 후 또다시 소위 ‘이재수의 난’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발생함으로써 격앙되기 시작하였다. 1901년에 발생하였던 이 농민봉기는 당시 제주도에 전래되고 있었던 천주교에 의한 폐해와 광무개혁에 따라 새로운 정세관으로 파견된 경래 봉세관에 의한 폐해 등의 혁파를 요구하며, 농민들이

저항한 사건으로 여태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던 어떤 농민봉기보다 반제·반봉건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였고 또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감행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조선의 개항 후,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 등과 각축을 벌이던 프랑스의 조선에 대한 침략방식의 특징은 그 침략이 천주교라는 종교의 외피를 앞세우고 감행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즉 이 당시의 프랑스에 의한 전교사업은 “이미 이교도에 대한 개종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화 또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정치적 무기”<sup>4)</sup>로써 조선침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일면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천주교가 제주도에 전래되었던 것은 1899년 앙베드로라는 도민이 영세받고 내도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던 것이 그 시작으로서, 이후 프랑스의 카톨릭교회는 Marcel Laccouts(한국명 구마슬)을 파견하여 교세확장에 주력한 결과 1901년에 이르러 영세자가 242명, 예비 신자가 약 700명에 달하게 되었다.<sup>5)</sup> 그런데 천주교는 제주도에 유입된 때부터 신부의 권위를 이용한 정치적 특권을 향유하면서, 도민에게 린치를 가하는 등의 (정치적)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도민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었다.<sup>6)</sup>

한편 1897년 광무개혁을 통하여 조선정부는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종래의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고 정세 이외의 각종 잡세를 신설함으로써 부족한 국가재원을 충당하려고 도모하였다(강창일 1984:29-30). 이 결과 대부분의 토지가 둔토 및 목장토였던 제주

4) 권상강남, “프랑스 자본주의와 일본 개항”, 석정관치, 관구상지(편), 『세계시장과 막달 개항』(동경: 동경대학교 출판부, 1982), p.148, 강창일, 앞의 논문, p.7에서 재인용.

5) Chang-mun Kim and Jae-sun Chung, *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Seoul: Catholic Korea Publishing Co., 1964), p.320. 이 당시 천주교에 입교한 자 중에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 외에 정치·특권적 원조, 보호 및 향유를 목적으로 하여 입교한 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The Korea Review*, Vol. 1, no. 6(June, 1901), p.267.

6) 천주교도에 의해 자행된 (정치적) 불법 행위의 예는 강창일, 앞의 논문, p.32 및 이순옥, 『이재수 실기』(대판: 중도문화당, 1932), p.13을 참고하라. 이에 관한 반론으로는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천주교 제주교구, 1979), pp.85-95를 참고하라.

도에도 1899년 11월에 봉세관으로 강봉헌이 파견되어 국유지의 조사, 집조 및 잡세의 징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강봉헌은 광무개혁으로 일원화되었던 국가재정기구인 탁지부로부터 지방관에 대한 감독권도 부여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수취체제의 대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종래의 목사나 군수 역할을 봉세관이 인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꿔말하면 지대의 경우에 그 수취 체제가 ‘작인→사음→군수→목사→국가’의 체제에서 ‘작인→사음→봉세관→궁내부 내장원’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위의 논문 30). 따라서 봉세관은 새로운 봉건적 수탈기구로서 도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지방관에게는 그들에게서 수조권과 수세권을 빼앗아간 자로서 지방관과 대립, 갈등하였다. 이것은 결국 봉세관이 수조 및 수세 등의 업무에서 이전에 지방관에 의해 선정되었던 사음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새로운 사음의 선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봉세관은 공토사음, 감색, 잡세수취인 등으로 당시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던 천주교도를 전용했고, 그들에게 특산물에 대한 도고권 등의 경제적 특권을 줌으로써 봉세관과 천주교들 간의 결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탁하에서 봉세관과 천주교도에 의한 경제적 착폐<sup>7)</sup>가 자행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도와 도민 간의 충돌이 빈발해졌고, 이때부터 천주교는 농민에게는 봉건적 수탈자로서, 상인에게는 상권을 빼앗으려 하는 침략자로서, 지방지배세력에게는 조세의 징수권을 빼앗은 새로운 지방지배세력으로서, 또 토속적 신앙이 강한 부녀자에게는 종교적 침략자<sup>8)</sup>로서 인식되기 시

7) 봉세관과 천주교도는 서로 결탁하여 전세의 신설, 잡세의 징수, 지대의 인상, 소작권의 농탈, 상업권의 탈취, 소유지의 강탈 등의 경제적 착폐를 자행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강창일 앞의 논문, pp. 32-34 및 이순옥, 앞의 책, p. 14를 참고하라.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김옥희, 앞의 책, pp. 78-85, 95-98을 참고하라.

8) 천주교는 제주도민의 토속적 민간신앙의 파괴자로서 인식되었다. 그들은 제주도의 여성들 대부분이 믿고 있던 무교를 미신으로 취급하여, 신당과 신목을 폐파하기도 하고, 타인의 묘를 곧바로 무단 이장해서 전통적인 유교적 예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신당, 신목을 무단으로 폐파했던 것은, 그러한 신당과 신목을 일종의 종교적 상징으로 깊이 믿고 있던 도의 여성들에게

작하였다.<sup>9)</sup>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봉세관, 천주교도 및 유배인이 결합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관, 토호세력 및 도민이 결합한 형태로 침략·침탈적 외래세력과 방어적 토착세력 간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주교측의 도발에 의해 발단된 1901년의 농민봉기는 이재수 등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조직적 무장투쟁을 전개하여(Sands 1986: 242) 한때 제주성을 점령한 다음 약 500~600명의 천주교도를 살해하고,<sup>10)</sup> 또한 ‘황성칠의 난’ 당시에 그것을 진압했던 현지 양반세력 및 경래 유배인과 관리들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한편 지방관아를 습격하는 등(강창일 1984: 41) 약 한달간 지속되면서 가열되어 갔다. 그러나 제주성이 함락된 이후 농민군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투쟁의 지도원리, 투쟁대상, 노선 등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빈번해지면서 내부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위의논문 42-43), 이때 정부측의 파병과 프랑스군의 내도에 의하여, 농민간의 해산을 조건으로 해서 일체의 세폐 및 교폐를 혁파할 것, 봉기 가담자의 죄를 문책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약속을 어기고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등의 13인의 주모자를 서울로 압송하였고(Sands 1986:241)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6,315원의 배상금을 제주도민에게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1904년 5월에 도민에 의해 프랑스공사에 납부됨으로써 사건의 사후처리가 종결되었다(김인재 1967:108-113). 그러나 정부군에 의해 ‘이재수의 난’이 진압된 후, 대한제국의 식민지로서의 급진락과 함께 더욱 세력을 얻은 천주교는 지방관과 결탁하여 그전 이상의 불법적 침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다시 도민과 천주교의 대립은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강창일 1984:44).

## 제 2 절 일제하의 제주도 민중운동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자국 자본의 운동논리에 맞추어, 토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그 결과 종래의 민란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야기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강창일, 앞의 논문, pp.34-36.

9) 제주민요찬리사 황기제의 보고, 『황성신문』(1901.6.24).

10) *The Korea Review*, Vol. 1, no. 12(June, 1901), pp.265-266.

지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 그리고 병참기지화정책 등을 통하여 조선의 농업과 산업 및 제 자원을 수탈 하였고,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정치와 가만적인 문화정치를 통하여 조선 민중을 철저히 억압하였으며, 더 나아가 노예화교육, 황민화운동 등을 통하여 조선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 하였다(박경식 1986). 일본의 이러한 악랄한 식민지 지배는 결국 조선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제의 조선지배 시기는 일제에 항거하는 조선 민족의 줄기찬 투쟁과 여기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점철되어진다.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지배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제주도내의 역둔토 및 민간지 등을 약탈하였고, 누에고치, 면화 및 어장 등을 수탈하였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제주도를 군사적으로 중요시하여, 섬 전체를 요새화하면서 도민을 수탈하였다. 동시에 일제는 이러한 수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도제는 실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독점한 도사를 파견하여 제주도 민중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민은 살 길을 찾아서 일본 등지로 유랑하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고 있었다.

일제통치에 대한 제주도 민중들의 투쟁은 1908년의 의병투쟁, 1918년의 보천교사건 등을 통하여 줄기차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1919년 3·1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때를 같이하여 제주도에서도 3월 21일 반일 독립운동이 발생했다. 김시범과 김장환 등 13명이 주도하는 약 500~600명의 도민은 조천의 속칭 미밋동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제주읍과 함덕 방면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때 연락을 받고 출동한 무장경찰 수십명이 군중과 대치함으로써 한때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총검의 위협으로 군중은 해산되고 앞장섰던 김시범, 백웅선 등 13명이 검거되었다(임창준 1982). 그러나 독립을 갈구하는 도민의 의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22일, 23일, 그리고 24일에도 계속하여 시위행진을 벌였으며, 이 결과 독립운동은 전도로 확산되어 약 4,450여명의



도민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고, 여기에 놀란 일제는 육지로부터 응원부대를 요청하여서야 도민의 반일 독립운동을 진압할 수 있었다(김봉현 1978:322).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에도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의 민중운동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제주도에서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최초로 결성된 모임은 사회주의사상 연구를 위한 사상단체로서 홍양명, 김택수, 김민화 등이 1921년에 조직한 ‘반역자 구락부’였다. 그런데 이 모임은 “봉건사상의 잔재와 부르주아, 민족주의사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직체로서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곧 해체되었으며, 1923년에 새로이 ‘신인회’가 강창보, 김택수, 김정로 등에 의해 결성되어 “맑스 레닌주의 사상을 그들의 투쟁지침으로 하고 이를 계기로 민중에 침투하여 반제·반봉건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셋별 소년단’을 비롯한 청년동맹, 소년단, 소년동맹, 소녀단, 각종 친목단체 및 독서회 등의 청년, 학생단체가 각면, 각리에 조직되어, 초보적인 사회주의 연구, 선전 및 기관지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위의 책 324-325). 한편 ‘조선공산당’의 창건을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강창보<sup>11)</sup>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도적인 조직 구축에 진력하였다(위의 책 326).

제주도에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된 후, 공산주의자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항일운동은 항만 노동자에 대한 일본인 감독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1929년에 발생한 ‘산지항만노동자운동’이었다. 일제는 제주도를 강점한 후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필요에서 도로의 신설, 확장과 각 항만의 축조 개수공사를 적극추진하였는데, 도사마에다는 제주도에 부임하여 오자 제주도의 해상교통의 중추항인 산지항을 개수, 확장할 것을 결정하고, 60만원의 자금과 100여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노동자들 중의 일부는 독서회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고 있었던 관

11) 강창보는 김문준, 김시용과 더불어 전국적 명성을 얻은 제주도 출신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로서 후에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1월에 대전형무소에서 피살되었다고 한다(고영민, 1987:60).

계로 반일 의식이 높았고, 이때 일본인 감독의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자 마침내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자 김두경 등의 지도하에 “구타 반대”, “최저생활 보장”, “임금 인상”, “조합 조직”, “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여 수십일간 투쟁한 결과,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성공하였다(위의 책 328-330).

한편 193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민은 1931년의 제주농업학교 학생의 ‘동맹휴학사건’<sup>12)</sup>을 시발로 하여, 중문면의 ‘적색농민조합투쟁’과 세화리의 ‘해녀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계속 투쟁해 나갔다.

일제는 1919년 ‘조선잡업령’을 공포, 조선에서의 양잠을 장려하여 일본의 견직생산의 초과이익을 보증하였는데, 1925년에는 15개년간 누에생산 100만 석, 뽕나무밭 10만정보, 양잠호 수백만호를 목표로 한 ‘산견증수계획’을 세워 농민에게 양잠을 강요하였다(박경식 1986:248). 이 당시 제주도에서도 농가호수의 3할이 양잠을 하고 있었으나 일제는 ‘산견증수계획’에 따라 각 호당 3무보(1무보는 30평)의 뽕나무밭을 개간하고 1호 평균 1.5매의 누에를 육성하도록 강요하여(조선총독부 1929:36), 관제조합을 통하여 뽕나무묘목을 강제 배급하고 고가의 대금을 강제로 징수함과 함께 생산물의 판로를 제한함으로써 도민을 수탈하였다. 이에 대해 중문면의 농민들은 김한정이 조직하였던 적색농민조합을 중심으로 “뽕나무묘목 이식 반대”, “잡업조합 해체”, “면화조합 해체”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일제와의 투쟁에 돌입하였다. 도민들의 항의에 놀란 일제는 무장경찰을 투입하여 40여명의 농민들을 검거, 투옥하였으나 농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일제는 강제 이식을 철폐하고 잡

12) 이 사건은 제주농업학교의 졸업 예정자 중 김원유 등의 학생이 ‘반일적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졸업장을 수여받지 못하자 동료 학생들이 졸업식날에 “식민지통치 반대”, “식민지노예교육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제주농업학교 학생 전원이 동맹휴학에 들어 갔으며, 이를 경찰이 무력으로 탄압하자 이 사건이 전도적으로 파급되어,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반일투쟁에 나서, 결국은 광주에서 68명의 경찰과 경비선 2척이 급파되고, 100여명 이상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한다(김봉현, 1978:330-331).

업조합과 면화조합을 해체해야만 했다(김봉현 1978:332-333).

‘적색농민조합투쟁’이 한창 가열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해녀들에 의한 반일투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일제는 수산업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0년 제주도에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을 설립(조선총독부 1929:62)하여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상인에게 강제로 판대하게 하고, 동시에 부당한 수수료, 교제비 등을 징수함으로써 해녀들을 수탈해왔다(김봉현 1978:339). 일제의 이러한 수탈에 항의하여 해녀들은 수차에 걸쳐 구두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일제는 이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해녀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갔고, 마침내 1931년 해산물의 판매를 둘러싼 부정사건이 폭로되자 해녀들이 궤기함으로써, 일제시대 제주도에서 발생한 반일투쟁중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반일·반제투쟁이 시작되었다.<sup>13)</sup> ‘구좌면 사회민중운동협회’ 및 ‘제주도 농민투쟁요구동맹’의 지도하에(위의 책 16) 결집한 해녀들은 1931년 12월 20일 “출가증명서 발부 제한의 철폐”, “어획물의 현품판매 및 입찰경매”, “도사의 조합장 겸직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김봉현 1960:340; 강대원 1970:92) 해녀어업조합 본부에 돌입을 시도함으로써 일제를 놀라게 하였다. 이후 해녀들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한때 도사를 굴복시켰을 뿐만아니라 일제 경찰기구를 완전히 제압하면서(김봉현 1960:341) 반일운동을 전도로 확산시켜 나갔으나, 일제가 전라도경찰부 소속의 무장경찰 80여명을 동원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함으로써 약 30일에 걸친 투쟁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제주도내의 반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시의 피검자 100여명중 31명에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 제주도위원회’와 그 외과단체를 파괴하였고, ‘동맹휴학사건’과 ‘적색농민조합투쟁’의 관련자 증보

13) 김봉현은 이 투쟁에 당시 제주도 농민의 양 40%가 참가하였고, 총동원된 연인원수는 16,636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책, p.343. 김봉현에 의해 제시된 이러한 수치들은 분명 착오가 있음에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녀투쟁이 일제시대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반일투쟁중 가장 광범위했고 치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석중인 자들까지 재구금함으로써(위의 책 342) 제주도의 반일투쟁 세력은 다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지하로 잠입해야만 했다.

### 제 3 절 제주도 민중운동의 성격

4·3폭동 이전에 제주도에서 폭발하였던 민중운동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민중운동들이 대체로 직접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 투쟁의 방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제주도에서는 지주—소작관계가 약했던 관계로 직접 국가가 지주로 등장하였고, 이 결과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공물을 통한 자의적 수탈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제주도민은 직접 봉건국가를 상대로 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면서 저항하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 봉건국가와 제주도의 결속을 부정하는 분리주의 혹은 독립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또한 조선의 어느 지역보다 비교적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당했고 그것에 고통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의한 어장침탈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으며, 프랑스의 비호를 받는 천주교에 의한 제반 폐해도 또한 도민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기에 대하여 도민은 그저 체념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비록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나—반제투쟁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일제의 통치에 항거했던 몇몇의 투쟁에 의해 더욱 풍부해졌다. 일제시대에 발생한 제주도의 민중운동은 비록 그 규모, 격렬성 등이 과거의 민중운동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에 의하여 오히려 한 단계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민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도민이 몇차례에 걸쳐 전개한 투쟁들이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한계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민의 주체적 투쟁역량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은 최후의 시기에 이르러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도민들은 이러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 제 4 장 제주도 4·3폭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 제 1 절 문제 접근의 가설들

구조기능주의자들의 소론을 빌 것도 없이 공산주의 운동, 정치폭동 등을 포함한 정치적인 상황, 사건은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적’ 혹은 ‘생태적’ 조건들과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게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반영하면서 전개되어간다.

농민사회의 정치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깊숙이 개입했던 시기에 성행했다. 그때 학자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 등의 지역에서 공산주의 활동 및 게릴라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들은 토지소유관계, 인구밀도 및 이동, 게릴라 근거지의 지리적 위치 및 기동성의 문제, 그리고 종교 및 문명을 등의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 문화적 변수가 공산주의활동 및 게릴라전의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연구하였다(Zagoria 1971; Mitchell 1968 & 1969; McColl 1967).

한편 B. Cumings는 해방 직후의 남한의 지방정치와 환경적, 생태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① 인구변동 ② 운송과 통신망 ③ 토지소유관계 ④ 지리적 위치 ⑤ 정치적 공백기간 ⑥ 과거의 정치적 경험 등의 생태적 변수들이 지방인민위원회의 활동과 정치참여의 급진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Cumings 1986:103-131).

이 글은 B. Cumings의 가설들을 검토함으로써, 해방 당시의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4·3폭동의 발발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 1. 인구변동

농촌사회의 인구증가와 이농현상은 농민을 전통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게 한 중심적 요인 중의 하나였다. 자신들의

고향의 농촌환경으로부터 일본, 만주, 북한의 공업지대로 이전한 한국 농민들은 귀향하였을 때 더이상 농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이들 중 특히 토지상실 등의 이유로, 혹은 강제징집을 통하여 일본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좌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가혹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인구변동은 각 지방의 정치참여의 급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지방적 수준에서 양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명백하다. 즉 가장 폭동이 심했던 경남과 경북은 1930년과 1940년 간의 인구유출이 각각 1,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폭동이 심하게 일어났던 제주도 역시 1930년대 인구유출이 심했고, 1944년에서 1946년까지 26% 이상의 인구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가설의 일반화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광범위하게 살펴볼 때 심한 인구변동은 정치참여의 급진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음의 틀림없다.

## 2. 운송과 통신

운송과 통신시설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두가지 양상을 띌 수 있다. 게릴라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을 때 그것들은 게릴라의 상호연락을 용이하게 해주지만, 진압군에 장악되어 있으면 게릴라를 진압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근대적인 지역과 후진지역 양쪽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역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진압군이 이 시설들을 재장악하면 그들은 좌익을 평정하는데 그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철도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대부분 단시일내에 인민위원회가 몰락하였고, 운송·통신망이 취약하여 서울로부터 병력을 파송하기에 어려웠던 제주도나 강원도 혹은 내륙산간지방에 있는 인민위원회는 오랫동안 버티었다는 사실에서 “철도 등의 운송·통신시설의 발달을 포함한 근대화는 최소한 인민위원회의 성장에 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민위원회가 힘을 유지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고, 후진성은 인민위원회의 성장을 고무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단 급진성이 나타나면 그것은 인민위원회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토지소유관계

1945년 한국처럼 토지소유관계가 불평등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한 조건 때문에 야기된 농민의 깊은 분노는 인민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인민위원회의 주장을 신뢰케 만들었고, 소작제도와 미곡수집 및 지주제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공격이 농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게 했다.

그러나 토지소유관계의 불평 등이 직접 농민들을 급진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하지는 못했다. 소작이 심한 지역에서 농민들은 소작인으로서 자기들의 존재기반을 위협받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며(그러나 이것이 이 지역의 농민들이 보수적이라는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그 지역에서 지주의 권한은 그것이 특히 유동적인 국가경찰기구에 의해 보호를 받을 때 하나의 강력한 통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남한에서 소작농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전북과 경기도 지역에는 인민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던 것도 쉽게 소멸했으며, 반면에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소작영농이 존재했던 제주도, 강원, 경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정치참여의 급진성은 소작비율과 반비례관계에 있으며 결국 “지주—소작관계가 강할수록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불리했고, 정치참여의 급진성도 낮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4. 지리적 위치

여러 인민위원회의 지리적 위치는 위원회의 힘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당시 남한에서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제주도와 강원도 및 경상도의 해안지방은 한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민위원회가 지배하였으며, 중부의 산악지대 및 전남의 도서지방과 충청도의 북서해안지방에도 역시 강한 인민위원회가 지배했다. 따라서 “지리적 고립성은 인민위원회의 존립 및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5. 정치적 공백기간

일제의 지배와 미군정 간의 정치적 공백기간은 일면 지리적 위치에 의하

여, 일면 미군정의 가용인원 및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군과 도일수록 뒤늦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길었으며, 공백기간이 길수록 인민위원회는 그만큼 더 강했다. 즉 “미군정이 들어온 시간상의 선후관계는 강한 인민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6. 과거의 정치적 경험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 후의 정치운동에 앞서는 정치적 활동의 수많은 선행들이 보여진다. 해방 후의 상황에까지 이어진 가장 직접적인 선행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운동이었던 적색농민조합을 보유했던 군들과 해방후 인민위원회에 의해 지배되었던 군들 간에는 놀랄만한 일치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적색농민조합을 가졌던 남한의 37개군 가운데 25개군이 1945~1946년에 통치기능을 행사한 인민위원회를 가졌다. 이러한 사실에서 “과거의 적색농민조합의 존재 유무가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방 후 남한에서 인민위원회의 발전과 정치참여의 급진성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감소했다가 해방 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것

② 소작농으로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지주의 힘이 무너졌거나 약했던 곳으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견제수단을 갖고 있을 것

③ 일제통치와 미군정의 정치적 공백기간이 길 것

④ 운송과 통신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인민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을 장악할 것

⑤ 역사적인 농민의 급진성 사례(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의 여부)가 있을 것

⑥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sup>1)</sup>

1) 농민층의 분화는 그들의 전통과 일상적인 노동양식에 대한 유대를 파괴하여 정치참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동원될 수 있게 한다. 해방 직후



⑦ 상당한 기간동안 좌익도 우익도 지배적이지 못하면서 우세한 좌익이 온건한 정책을 취한 정치적 복합성이 존재할 것(위의 책 204).

## 제 2 절 제주도 농촌사회의 특성

제주도는 전형적인 농촌사회이다.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일제의 지배기간을 통틀어 도민들의 약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비율은 당시 전국민의 농업종사비율보다 높았다. 따라서 제주도는 당시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보였으며 미분화된 직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도는 한반도 전체 혹은 남한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작농의 비율이 아주 낮았다. 농업에 종사한 대부분의 농민은 자영농이었다. 지주—소작관계가 약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일제를 거치면서 해방이 되었을 때

<표 1> 제주도 및 전국의 직업별 비율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 무 자 유 업	기 타 유 업	무직	계
제주도	1925	91.46%	3.81		0.75	2.38		0.99	0.45	0.14	100%
	1938	85.18%	2.55		1.08	3.55	0.43	1.94	2.53	2.73	100%
	1947 <sup>1)</sup>	69.8%	1.0		0.7 <sup>2)</sup>	0.7	0.3	1.6	12.1 <sup>3)</sup>	3.8	90% <sup>4)</sup>
전 국	1939	72.5%	1.5	1.5	3.2	7.3	1.2	4.0	7.0	1.8	100%
	1946	77.0%	1.7	0.3	3.4	5.2	0.9	5.7	5.2	0.6	100%

자료 :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二) : 제주도』(1929), pp. 21-22.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1939), pp. 7-8.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1948), p. I-336, III-19.

조선은행, 『경제연감』(1949), p. IV-23에서 작성.

주 1) 15세 이상만 계산.

2) 토목·건축업(0.2%) 포함.

3) 학생(1.6%) 포함.

4) 10%는 직업이 확실치 않음

경기도를 제외한 남한 각도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15개군 가운데 오직 한 지역만이 통치 기능을 행사한 인민위원회를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분화율이 낮았고, 인민위원회의 강력도에 따라 여러 군들의 순위를 매긴 것과 직업분화의 정도에 따른 순위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인민위원회의 강력성과 보다 분화된 직업구조 간에는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는 듯 하다 (Cumings 1986:202-204).

〈표 2〉 제주도 및 전국의 토지소유 형태

		자 작	자작겸소작	소작겸자작	소 작	피용자 및기타	계
제주도	1938	64.46%	17.07%		16.83	1.64	100%
	1947	68.11%	15.14	8.54	8.14	0.06	100%
전 국	1938	18.1%	23.9		51.9	6.1	100%
	1947 <sup>1)</sup>	16.47%	18.50	19.88	42.09	3.01	100%

자료 : 『제주도세요람』(1939), p. 57.

『조선경제연보』(1948), p. I-29

『경제연감』(1949), p. IV-29에서 작성.

주 1) 남한만 포함. 이하 별다른 주가 없으면 해방 이전의 통계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며, 해방 이후의 통계는 남한만 포함하는 것임.

까지도 변함이 없었는데 이것은 〈표 2〉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주—소작관계가 약하고 자영농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것은 제주도에는 논이 작고, 대부분 농지는 척박한 토질을 지닌 밭이었던 관계로 토지생산성이 낮았다는 것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 3〉을 보면 논은 전체농지의 1% 내외를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밭이었으며<sup>2)</sup> 또한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토지생산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제주도 자영농의 비율이 높았다고는 하나 〈표 3〉 및 〈표 5〉에서

〈표 3〉 제주도의 농지 및 1호당 경지 면적

	논	밭	계	농가호수	1호당 경지면적
1925년	895.4정	90064.4정	90959.8정	38258호	2.38정
1938	983	909987	91981.7	44018	2.09
1946 <sup>1)</sup>	2263	84161	86424	42476	2.03

자료 : 『생활상태조사(二) : 제주도』(1929), p. 18, 21.

『제주도세요람』(1939), pp. 51-52.

『조선경제연보』(1948), p. I-36, I-44, III-29에서 작성.

주 1) 이 해에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논 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틀림없다.

- 2) 이것은 1938년의 경우 전국의 농가가 평균적으로 소유한 호당 경지면적 1.624정 중에서 논 면적이 0.574정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미약한 수치이다. 『조선경제연보』(1948), p. I-37.

〈표 4〉 제주도 및 전국의 곡물 평균수확량 비교

	비 교 년 도	곡 물 명	1단보당 수확량
제 주 도	1940~1946년	논 벼	1.029석
	평균	보 리 류	0.695석
전 국	1937~1941년	논 벼	1.315석
	평균	보 리 류	0.864석

자료: 『조선경제연보』(1948), pp. 지 3-지 4에서 작성.

〈표 5〉 제주도 및 전국의 농지소유 현황

	제 주 도		전 국	
	1938	1947	1938	1947
10정보 이상	0.78%	0.05%	0.20%	0.01%
5~10정보	4.17	0.32	1.18	0.14
3~ 5정보	10.01	1.74	4.74	1.33
2~ 3정보	12.76	4.69	10.90	5.37
1~ 2정보	18.33	28.17	19.71	19.43
1정보 미만	53.97	75.04	63.26	73.72
계	100	100	100	100

자료: 『제주도세요람』(1939), p. 21.

『조선경제연보』(1948), p. 1-30.

『경제연감』(1949), p. IV-29에서 작성.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민은 2정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 혹은 남한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농지의 대부분이 밭이었고 또한 토지생산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민이 빈농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보조적인 생계수단을 찾아야 했으며 그것은 해녀들의 나잡어업을 통하여,<sup>3)</sup> 혹은 일제시대의 경우에는 일본으로의 진출 등을 통하여 강구되었다.

3) 즉, 1938년의 경우 해녀로 추산되는 8,410명의 여자가 전업 혹은 겸업의 형태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고, 또한 4,132명의 해녀가 한반도로(2,584명), 그리고 일본으로(1,548명) 출가하고 있었다. 『제주도세요람』(1939), p. 18, 113.

또한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서 폐쇄적인 혈연공동체 및 식수 등의 문제로 해안선에 집중되어 있는 집촌적 촌락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운송 및 통신수단이 제한되어 있었다. 제주도가 폐쇄적 혈연공동체 및 집촌적 촌락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농민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조건 아래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촌락의 “한 지도자가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게 되면…… 도민의 대다수가 불온사상에 감염되지 않을 수 없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8:437)는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은 당시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운송시설 및 제주도내의 운송과 통신시설이 열악하여 남한 전체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도민과 안면이 넓고 또한 ‘발로 뛰는’ 좌익 지도자들의 정치선전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컸었다고 하겠다.<sup>5)</sup>

### 제 3 절 일제통치의 유산

일제시대에 제주도는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사회·경제구조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제 2 절의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상공업 및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분화된 직업구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제주도는 원래 농업 및 어업이 주업이었던만큼 공업은 아주 빈약한 것이

4) 물론, 앞의 요인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여튼 당시 미군정도 “제주도민의 약 70%는 정치적으로는 좌익에 동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G-2 Report, March 19, 1947, 일월서각 통권 제 3 권, p. 608.

5) 해방 직후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일반항로는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있었고, 오직 부정기선만이 내왕했을 따름이었다. 『경제연감』(1949), p. 1-10. 한편 당시 제주도는 자동차 도로의 길이가 연장 186km에 불과하였고 여기에 운행하는 차량도 134대(영업용 승객차량은 38대)에 불과하였다. 또한 외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통신수단도 미비하여 신문은 좌익계가 운영하는 격일간지 1종뿐이었고, 라디오 청취자의 수는 289명(외국인 32명 포함), 전화 가입자의 수는 189명에 불과하였다. 『조선경제연보』(1948), p. 1-178 및 『경제연감』(1949), p. 1-109, 1-194, W-234, W-236.

〈표 6〉 일제시대 제주도의 제조업 현황

		1929				1939			종업원수
		공장수 (개소)	자본금 총액 (원)	종업원수 (인)	생산고 (원)	공장수 (개소)	자본금 총액 (원)	생 산 고 (원)	
양	달	3	15,000	72	41,040	6	2,000	6,000	
통	조 립	12	125,000	109	120,755	12	144,000	644,750	
패	구	11	33,500	187	52,660	32	45,600	31,000	
양	조	2	25,000	11	79,170	18	188,000	446,559	
초	기	6	59,000	67	94,960				
조	던	1	200,000	94	52,000				
기	타					7	266,740	126,961	
계		35	457,500	540	440,585	75	646,340	1,255,270	712 <sup>1)</sup>

자료 : 『생활상태조사(二) : 제주도』(1929), pp.76-81.

『제주도세요람』(1939), p.93에서 작성.

주 1) 당시 공업에 전업하던 인구만 계산한 것임 : 『제주도세요람』(1938), p.8.

어서 옹기, 기와 및 팽이 등의 농기구와 기타 철제공업 및 가정수공업에 불과한 삼베, 죽세공, 머리빚, 관물 등이 겨우 자급할 정도로 생산되고 있었다(조선총독부, 1929:76).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르러 제주도의 축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패구 등의 제조업과 제주도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던 양말, 양조 등의 제조업이 일본인에 의해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비록 보잘것은 없으나 제 2절 〈표 1〉 및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업인구 및 제조업종사자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제주도 농촌사회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동양식을 도입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는 통조림에 대한 군의 수요가 증가하여(제주도청 1939:93) 통조림 제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의 고용의 한계는 도민의 생존방식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당시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른 어업의 침체<sup>6)</sup> 등의 영향으로 도민은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 일본 등으로의 진출을

6) 일제는 1911년 6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어장을 약탈하고 근대적 기계를

〈표 7〉 제주도민 일본 거류자수 및 1인당 1년송금액 평균

	1926	1930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거 류 자 수	23,584인	31,786	47,271	50,045	48,368	46,463	45,943	45,950
평 균 송 금 액	10.51원	25.14	29.39	21.05	20.88	23.40	23.37	32.01

자료 : 『생활상태조사(二) : 제주도』(1929), p. 22.

『제주도세요람』(1939), p. 12, 17에서 작성.

모색하게 되었다.

즉 〈표 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민의 일본으로의 진출은 한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비록 1934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 거류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1938년 당시 평균적으로 제주도 가구 1호당 대략 1명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의 노동을 통하여 얻은 임금을 송금하고 있었다. 도일하였던 제주도민은 주로 대판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남자들은 철공, 범랑제조 등의 노동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여자들은 방직, 재봉 등의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제주도청 1939:13-16). 이 결과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조금씩 체득하게 되었고, 해방 후 이들의 귀환이 도민의 의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태평양전쟁의 직후에 일제는 대미작전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원래 일제는 군사작전의 필요에서 제 1 차 세계대전시에 제주도에 무선통신과 해군 기지를 설치한 적이 있었고, 중·일전쟁 시기에는 대륙병참기지의로서의 제주도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군사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김봉현·김민주 1963:10).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일제는 일급의 대미작전기지로서의 제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라산 중허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처

---

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했고 조선인에게는 오직 조어업만 허가함으로써 영세 어민으로 전락케 했다(박경식, 1986:115-116). 그 결과 제주도에서는 이 당시 조어업 혹은 나잠어업의 형태로 채취되던 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되었고 이는 결국 어업의 침체와 직결되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제 2절(표 1)에서 보여지는 수산업인구의 감소는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에 산재하고 있던 산악지대에 주진지를 설치하고 모슬포와 제주시에 비행장을 신설하였으며 지하동굴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해안지대에는 군함과 기관포를 배치하여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김봉현 1960:346). 그리고 1943년 3월경부터 야하타부대를 시발로 하여 일본군의 제주도의 배치가 시작되고, 다음해 말부터는 각지에서 패배한 관동군과 남방군을 증강, 배치하였는데 그 병력수는 20만에서 30만에 달하였다 한다(김봉현 1978:18-19).

이 결과 제주도민은 물질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 이것은 1945년부터 제주도 일원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즉 45년 5월 7일 미군의 공격을 피하여 육지로 피난해 가던 여객선이 폭격되어 280명이 사망한 것을 시발로하여 도민은 이후 미군에 의한 산지항, 한림 무기고, 그리고 모슬포 근해에 대한 폭격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위의 책 21-22) 이것은 미군에 대한 도민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군은 도내에 산재해 있던 막대한 양의 무기, 폭약, 탄약 등을 매몰하고 철수하였는데 이 무기들은 후에 제주도의 게릴라들이 무장하는데 중요한 보급원이 된다. 즉 이들 무기 중 일부가 후에 미군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나(G-2 Report, 1947년 9월 13일 p. 464) 그 대부분은 여전히 은닉되어 있었고, 이것은 일본군의 요새구축 당시 동원되었던 제주도민에게는 비교적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 제 4 절 해방 후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

해방 직후에 제주도가 겪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급증하는 인구의 문제였다. 즉 <표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제주도는 그 증가비율이 전국에서 2위에 해당하는 25% 이상 급증한 인구를 감당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과 중국대륙 등지에서 귀환한 도민은 이제 더 이상 농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표 8〉 제주도의 호수 및 인구

	1925	1938	1944 <sup>1)</sup>	1946
호수	42, 198호	49, 680		55, 229
남	95, 957			129, 679
인구	109, 521인			146, 469
녀				
계	205, 478	203, 651	219, 548	276, 148

자료 : 『생활상태조사(二) : 제주도』(1929), p. 20.

『제주도세요람』(1939), p. 7.

『조선경제연보』(1948), p. Ⅲ-20에서 작성.

주 1) USAMGIK, *Population of Korea*, p. 2, B. Cumings, 앞의 책, p. 116에서 재인용.

행동양식 및 의식을 탈피하고 있었고 제주도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파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일본군에 종군하였던 군인, 군속, 징용노무자들과 중국에서 의용군, 팔로군의 적을 가졌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437) 이들은 후에 제주도민의 정치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민의 이와 같은 대규모 귀환과 더불어 제주도는 심각한 경제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 등지에서의 노동을 통하여 송금을 하던 도민이 귀환함으로써 제주도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던 송금액이 감소하였고<sup>7)</sup> 또한 귀환도민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상태에 있어야 했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경제상황은 대일교역의 불법화 및 도 승격,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통상형태의 붕괴와 북으로부터의 원료공급의 두절에 의한 공업 및 농업생산고의 감소 등의 문제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Merrill 1980:153).

7) 그리고 이들 도민 중에는 극동연합군 최고사령부가 1945년에 발표한 귀환 조선인의 휴대물품 및 금액 제한조치에 의하여 빈털털이로 귀환한 자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H.P. Bix, “지역적 통합: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F. Baldwin(ed.) 사계절 편집부(역), 『한국 현대사, 1945~1975』(서울: 사계절, 1984) p. 155.

8) 이들은 거의 제 2 절(표 1)에서 보여지는 1947년 당시의 직업이 불확실한 10%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조선경제연보』(1948), p. I-203에 1946년 11월 30일 현재 제주도의 실업자 수가 23,013명으로 추정되어 있고, 이것은 (표 1)에 계산된 제주도의 15세 이상의 인구 149,928명의 15.3%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표 9〉 제주도 및 남한의 사업장수 및 노동자수

	제 주 도		전 국	
	사 업 장 수	노 동 자 수	사 업 장 수	노 동 자 수
1944	72개소	1,833인	9,323개소	300,520인
1946	32	603	5,249	122,159
감소비율	55.6%	67.1%	43.7%	59.3%

자료 : 『조선경제연보』(1948), pp. I-201-202에서 작성.

즉 당시 공업분야는 〈표 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업장 수 및 노동자수가 일제시대 말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었고, 특히 패구공장 이외의 공장은 거의 조업중지의 상태에 있었다.<sup>9)</sup>

한편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사정은 다를 바 없었다. 〈표 1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농업생산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에 의한 제주도에서의 곡물수집정책<sup>10)</sup>의 실시는

〈표 10〉 제주도의 주요곡물생산고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미 곡	20,102석	11,236	19,310	11,151	11,152	14,182
맥 류	280,724석	153,546	204,796	268,133	187,480	88,785
기 타	239,416석	178,631	387,181	324,805	272,401	236,641
계	540,242석	343,413	611,287	604,089	471,033	334,608

자료 : 『조선경제연보』(1948), p.4에서 작성.

9) 『조선경제연보』(1948) p.12 및 『경제연감』(1949), p.Ⅲ-147을 참고하라. 여기에서는 당시 제주도의 지방직할귀속사업체 18개소 중에서 9개소가 운휴 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원래 미군정은 곡물의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여 곡물의 수급문제를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은 결국 지주독점의 시장체제로 귀결되었고, 곡물에 대한 투기, 매절, 과잉소비가 행해져 그 결과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기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침체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과거 일제가 행했던 곡물수집정책을 부활하였는데, 이 정책은 한 연구가에 의하면, 종종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한다. B. Cumings, 앞의 책(상), pp.338-350. 그리고 당시 미군정의 곡물정책과 여기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연구로는 김종범(1946)을 참고하라.

〈표 11〉 제주도 및 전국의 곡물수집 상황

	제 주 도		전 국	
	1946	1947	1946	1947
미국 할당량(A)	2,500석	4,000석	4,295,500석	5,156,000석
수집량(B)	1,207	4,614	3,564,789	5,004,859
B/A 비율	48.3%	115.4%	82.9%	97.1%
하국 할당량(A)	—	17,000석	1,289,000석	711,000석
수집량(B)	—	3,189	619,272	695,932
B/A 비율	—	18.8%	48.0%	97.9%

자료: 『조선경제연보』(1948), p. I-300, I-301, I-302, I-304에서 작성.

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또한 곡물수집에 대한 도민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표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군정에 의한 곡물수집실적은 제주도에서 특히 저조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곡물수집에 대한 도민의 강력한 반발과 좌익계에 의한 반대선전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도민들은 곡물수집 관리들을 집단구타하는 등의 행위로 곡물수집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였고(G-2 Report, 1947년 8월 15일 pp. 361-362), 한편 좌익계에서도 곡물수집정책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미군정의 곡물수집을 방해하였는데(G-2 Report, 1947년 8월 20일 p. 384), 이러한 상황은 3·1절사건 이후의 도의 파국적 정치상황 및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청년단과 도민 간의 충돌에서 야기된 제주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었다.

1947년 3·1절 시위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 도민의 항의가 격렬해져는 등, 제주도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되어 가자, 미군정은 서북청년단과 민족청년단 등의 우익청년단을 파견하여 제주도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의 결과 우익청년단과 도민 간의 충돌이 빈발하게 되었다. 우익청년단원들은 제주도를 ‘붉은섬’으로 인식하여<sup>11)</sup> 내도 이후 줄곧

11) 예를 들면 당시 서북청년단 제주도지부의 조직부장이었던 안철은 미군정 요원에게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G-2 Report, November 25, 1947, 일월서각, 통권 제 5 권, p. 90.

도민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규적인 봉급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갈취, 협박, 공갈 등의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sup>12)</sup> 이들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도민과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결국 도민의 미군정에 대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 제 5 장 제주도 4·3폭동의 정치적 배경

### 제 1 절 5·10선거 결정전까지의 일반적 정치상황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이 발표되자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이미 조직되어 있었던 항일 비밀결사인 건국동맹을 모태로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전국적인 통치조직을 건설해 나갔다. 이 결과 8월 말까지 전준은 전국 각지에 145개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Lauterbach 1984:36) 초기의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전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국내 우익은 전준을 용공시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임정봉대론을 명분으로 하여 미군의 진주시까지 사태를 관망함으로(조병옥 1959:144-145) 전준의 초기의 정국의 주도권은 강화되어 나갔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군의 진주가 알려지고 또 미군의 진주함으로써 반전되어 가기 시작한다.

미군의 진주가 알려지자 전준은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사실상의 정부<sup>13)</sup>라고 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로하여 미군을 맞으려는 노력을 명백히 하였다(Scalapino & Lee 1972:238-239).

12) 김봉현, 김민주, 앞의 책, pp.52-53, 94-95 및 G-2 Report, November 24, 1947, 일월서각, 통권 제 5 권, p.79. 이들의 행패는 도청을 습격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예를 들면 47년 10월 서북청년단원들이 도청을 급습하여 숙직직원을 포획하고 배급물자를 강탈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 김두현이 물매를 맞아 사망하였다고 한다(진성범, 1982).

13) E.G. Meade, 1952:54 및 조순승, 1982:68. 당시 한국의 농촌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는 “인공은 남한 전체를 통털어 가장 강력하고 활동적인 조직이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며, 또한 미군정 관리도 “인공의 세력은 성장하고 있고 그들은 온갖 수준에서 정부를 조직하고 있으며, 다른 당들은 그들과 공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군정이 다른 당에게 유리하도록 중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다른 당도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다(Scalapino and Lee, 1972:246).

좌익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내 우익은 미군의 진주가 알려지자 비로소 조직결성에 착수하여 힘을 규합해 나갔고, 9월 8일 미군의 진주와 때를 맞추어 ‘인공타도’라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서울시내에 살포함으로써 인공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9월 16일에는 한민당을 창당하였다.

미군의 한반도 진주는 9월 8일 하지의 제24군단의 인천 상륙을 시발로 하여 시작되었다. 미군은 진주 이전부터 9월 2일 “민중에 대한 포고 및 제 명령은 현존하는 제 관청을 통하여 공포된다”는 하지의 포고문(송남현 1985: 89)을 살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의 존속을 당연시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9월 9일 발포된 맥아더의 포고 제 1호를 통하여 확인되었다.<sup>2)</sup> 특히 미군 정장관 아놀드는 “현재의 경찰조직은 그것이 한국인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Cumings 1986:239) 한국이 ‘점령국’이 아니라 ‘해방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미군 진주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투시되고 있는 바, 즉 미군은 인천 상륙 당일에 미군환영대회에 나갔던 조선인들을 학살한 일본군의 행위는 묵인했고(Lauterbach 1984:39) 서울 진주시에도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적의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미군의 당시의 서울 진주 모습을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미군이 9월 9일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서울시청 앞까지 나갔는데, 한국인을 보는 미군의 눈은 멸시와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나는 이러한 미군의 모습을 보고 끓어 오르는 모욕감을 참으며 생각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자세는 전쟁 중에 적국에 상륙한 군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않은가! 한국 민중은 미군을 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왜 그들은 우리들을 마치 적을 보는 것처럼 하는가! 금방이라도 우리들에게 달려들어 총점으로 찌를듯한 자세가

2) 맥아더 포고 제 1호 제 2조는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식사업,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 기능과 업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맥아더의 포고 제 1호 전문은 위의 책, pp.97-98을 참고하라. 특히 제 3조는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고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포고문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게 발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조순승, 1982:64).

해방자의 모습이란 말인가!’(고영민 1987:50-51)

결국 미군은 해방자로서(한국을) 점령<sup>3)</sup>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를 합법적 통치기구로 온존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해방된 한민족의 감정과 의사를 무시하려 했으며, 동시에 9월 20일 “군정청은 남한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여(송남현 1985:100) 인공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 인공과 적대관계에 있고 부일요소가 있다고 지탄받던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제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우연히 이루어졌던 것일까? 어느 연구가의 평가와 같이 미군은 한국의 점령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이기적인 목적도 가지지 않았으며, 정책도 갖지 못했었고(Henderson 1978:121) 그 결과 우연히 그리고 별 고려없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출현하였던 것일까?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아시아정책에 관한 한 연구는 이것을 부인한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아시아점령정책은 기존의 반식민지 해방운동체의 성격에 대한 정보분석에 기초하여,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반식민주의 입장을 취했고 독립에 찬성했으나, 좌익이 우세한 곳에서는 ‘신탁통치’나 혹은 식민주의의 ‘해방된’ 계속 유지를 취하는 것이었다(Kolko & Kolko 1982:28).

한국에 대한 미군정의 정보는 일본의 패퇴와 더불어 이미 조직되어 있던 지하정부구조(인민위원회, 즉 건준)가 손쉽게 권력을 인수할 수 있을 것(Meade 1952:34ff)이라고 분석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인 및 한국인 지주에 의한 강탈적인 토지소유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무차관 그루는 전쟁의 종결로 한국의 소농계층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기대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기 쉬운 것이다”<sup>4)</sup>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3) 이 표현은 Lauterbach의 것이다.

4)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III (Washington, 1945), p.561, 563, J. Kolko and G. Kolko, 앞의 논문, p.30에서 재인용.

정책은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온존시키는 방향으로의 식민주의의 ‘해방된’ 계속 유지에 일차적으로 두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이것은 한민족의 격렬한 저항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고영민 1987:52).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토착 과파를 분쇄하여 한국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Meade 1952:52)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갔고<sup>5)</sup>, 동시에 카이로 선언 이래 미국의 일관된 대한반도 문제해결 방식이었던 신탁통치안을 제기 하게 된다.

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 영국, 소련의 삼국 외상은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한국에 관한 결정서에 합의한다.

- ① 한국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② 한국민주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소 점령군 사령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그 제안 작성에 있어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 및 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한국민주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작성된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한국민주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 ④ 한국에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미·소 점령군 사령부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2주 안에 개최한다(송남헌 1985:248).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의 정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김구 중심의 임정세력은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면서 전투적인 반탁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임정세력은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반탁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기구를 포함한 미군정기구들을 임정이 접수하겠다고 격렬한 내용의 임정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위의 책 253), 미군정과

5)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공격은 10월 10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인공 부인 공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인공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치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인공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당시 인공은 미군정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하고 있을 정도였다. G-2 Report, October 20, 1945, 일월서각, 통권 제 1권, p.169.

입정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상태가 전개되었다.<sup>6)</sup>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반탁운동은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반탁운동을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삼고 김구와 제휴하였으나, 김구가 '반탁'의 민족주의적 계기에 역점을 둔데 대하여 이승만은 미·소 냉전의 전망을 선취하여 어디까지나 반공을 기본으로 해서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것으로(최상룡 1983:359) 이승만의 이러한 입장은 좌익계가 반탁 의사를 급작스럽게 전개함으로써 강화되었다. 좌익계는 처음 반탁의사를 명백히 했으나, 46년 1월 3일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지지를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신탁통치는 한국의 즉시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4국의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식민지화의 위험이 제거된다고 강조하면서 소련 점령당국이 공포한 이른바 '후견제'의 논리로 민중을 설득하려고 하였다(위의 논문 361). 그러나 좌익계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결국 반탁과 반공, 반소가 동일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미군정은 반탁운동에 나타난 민중의 지지에 착안하여, 그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효성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우파의 반탁운동을 묵인했고 결과적으로 김구 중심의 전투적인 반탁세력의 에너지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반공노선에 흡수되어(위의 논문 359) 좌익계를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던 것이다.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좌·우익 세력이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개편되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고 있을 때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1946. 1. 16~2. 5)은 회담의 초기부터 양측의 의견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고, 결국 1개월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점과 우편물의 교환, 라디오주파수 할당, 38도선 왕래, 북에서의 송전의 계속 등의 사항에만 합의한 채 산회하였다(송남현 1985:259-261). 이후 개최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와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 5. 21~8. 12)도 결국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할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자격문제 및 문제의 접근방식의 차이로 결렬되고 만다. 이 문제에 대한 소련

6) 입정의 이러한 시도는 미군정에게는 일종의 쿠데타로 받아 들여졌다. G-2 Report, January 2, 1946, 일월서각, 통권 제 1권, p.500.

의 일관된 입장은 반탁세력을 한국민주임시정부의 수립에서 배제시키고 한국민주임시정부의 수립을 최우선시하여 경제와 행정의 통일을 뒤로 미루는 정치 우선적인 접근방식이었음에 반하여,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소수파(결국 좌익세력)에 의한 한국지배를 방지하고, 한국민주임시정부의 수립에 앞서 경제와 행정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위의 책 pp. 313-328 및 pp. 475-497).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 못된다. 불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의 수립을 기어코 봉쇄하려고 하였고, 소련 역시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부의 수립을 철저히 저지하려 한데서 결렬된 것”이었다.”<sup>7)</sup> 더구나 남·북한의 분리발전 및 국제정치상의 냉전의 시작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장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김학준 1981:44-45).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전술상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인 49년 5월 24일 미군정 정치고문 팽던은 미국무장관에게 “소련은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통일전선정책과 다를 뿐인 정책을 한국에서 강행할 의도임이 너무나 뚜렷하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분명히 한반도 전역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미국무성비밀외교문서 1984:284)라고 보고했으며, 5월 25일 미국무장관은 이에 팽던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인은 남한에 단독정부의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위의 책 288)”는 하지의 정치고문 굴펠로우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함으로써 신탁통치안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술상의 변화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한다는 미군정의 대한반도정책의 전략상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결국 좌익계에 대한 철저한 공격으로 연결되었다.

7) W. Macmahon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55), p.54,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1981) p.44에서 재인용.



미군정은 반탁운동의 분위기에 편승한 반공노선의 확산에 힘입어 제 1 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전후한 시기에 우익강화와 좌익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미군정은 국제적 위임사항이 아니었으며, 상부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또 군의 창설이 소련을 자극하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송남현 1985: 331) 38선 방어와 소요 진압을 위한 건군사업을 계획·추진하여, 마침내 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일본군의 배경을 가진 장교들을 주축으로 운영해 나갔다(Kim 1971:48).<sup>8)</sup> 이와 같은 우익강화작업과 함께 미군정은 좌익계의 약화를 시도해 나갔다. 미군정은 46년 2월 23일 정당의 비밀활동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정당등록법’을 발표하여 좌익계 정당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했으며(김점곤 1983:53) 제 1 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부터는 좌익에 대한 공격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McCune 1950:72). 특히 미군정은 46년 5월 조선정관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를 좌익계에 대한 공격의 호기로 삼고 남한 전국에 걸쳐 좌익계와 관계된 건물들을 철저히 수색함과 동시에 9월초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의 조선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고, 또한 9월 7일 ‘조선인민보’, ‘중앙신문’과 ‘해방일보’ 및 여타 좌익계 신문들을 ‘선동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폐간하였다(Cummings 1986:68-79). 47년에 접어들자, 미군정의 좌익계에 대한 공격은 더욱 가열되기 시작하여, 경찰에 의한 직접공격 뿐만아니라 경찰의 지원을 받는 우익테러집단의 좌익계에 대한 테러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McCune 1950:86-88).

미군정의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좌익계는 46년 7월 소위 “정당방위의 역공세”를 주장하는 신전술을 채택하여(박일원 1948:48-50) 반격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때에 발생한 ‘9월 총파업’과 이에서 발전한 ‘10월 인민항쟁’을 통하여 그들의 힘을 과시했다. 9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 철도종업원 4만명의 총파업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련이 좌익계의 투쟁은 남한 전역의 73개 시군에 파급되어, 연인원 110만명이 참가하여, 최고 1,000명이 사망하였

8) 한편, 일본군 출신이 국방경비대의 주력이 되었던 배경에 대하여는 한용원 1984:47-48을 참고하라.

고, 16,000여명이 부상, 12,000여명이 체포되었던 해방후 가장 대규모의 대중투쟁이었다(조선통신사 1947:258; 대검찰청수사국 1965: 제 5 장; 김남식 1984: 제 8 장). 이 일련의 대중투쟁은 미군정에 가해진 최초의 충격으로서 그 과정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미군정의 실정이 부각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우익 특히 경찰세력의 강화를 촉진하여 인민위원회와 그 관련 단체의 몰락을 야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Cumings 1986:207). 특히 이 사건의 진압과정에서는 경찰의 야만성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미군정 문서는 “봉기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만행이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기록하여 경찰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비판하였다고 한다(위의 책 233).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46년 말에는 미군정과 좌익계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적대적으로 되었다. 좌익계는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며 조직을 정비한 다음 47년을 맞이하고 이후 ‘국대안반대투쟁’, ‘3·1시위사건’, ‘3·22파업’, ‘7·27대회’<sup>9)</sup> 등을 통하여 미군정에 저항해 감으로써 미군정과 좌익계는 이제 더이상 화해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46년과 47년에 걸친 좌익계의 대미군정 투쟁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들이 준비가 없는 무모한 도발로 세력의 약화를 자초했으나, 여전히 전면적인 무장투쟁의 준비는 미처 안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주장도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돌리라”는 정치적 요구가 투쟁목표 핵심으로 “미제 축출”의 주장은 전면에 부각되지 않고 있었다.

## 제 2 절 5·10선거 결정전까지의 제주도 정치상황

일제의 항복이 발표되자 제주도민은 패전군임을 망각한듯한 일본군에 의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던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sup>10)</sup>를 극복하면서 제주

9) 이러한 사건들의 비교적 자세한 경위는 대검찰청 수사국, 앞의 책, 제 8 장 및 김남식, 앞의 책, 제10장을 참고하라.

10) 일본군은 ‘관내 일반 민중에게 고한다’는 포고를 발표하여, “인심을 동요시키고, 치안을 해치는 행위는 엄벌한다”고 도민을 협박하였고, 군인을 경찰에 전속시켜 경찰기구를 강화하였으며, 도민에게 불법공출을 요구하면서, 집단적 태러를 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김봉현, 1978:26).

도의 건준 및 인민위원회의 결성에 착수하였다. 45년 9월 10일 도민은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있던 청년대, 보안대 및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의 ‘...관리위원회’, ‘...복구위원회’ 등을 모태로 오대진을 위원장으로 한 제주도 건준을 결성하여 미군정의 탐사팀으로 제주도에 파견된 미군정 사법부요원 에 모리 우달 및 당시 도사(대리) 치오타와 일본군 제58군 사령관 가쓰키를 만나 다음의 3개항을 요구하였다.

- ① 치안유지와 전국사업을 위한 정치활동에 절대로 간섭과 방해를 말 것.
- ② 일본군과 경관을 즉시 무장 해제할 것.
- ③ 행정을 건준이 도·읍·면의 결성과 함께 양도할 것(김봉현·김민주 1963:16).

이러한 도민의 요구에 대하여 미군정은 일본군의 항복만 받고 본토로 귀환함으로써<sup>11)</sup> 도민의 요구를 묵살했고, 일본군 또한 “미군의 도 군정장관이 부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도민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도민을 위협, 공갈하여 건준을 파괴하려고 하였다(위의 책 186).

이러한 일본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민은 9월 15일에는 제주읍 인민위원회를, 그리고 9월 22일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조국의 자주통일 독립과 민족의 완전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것과 일제의 잔재세력과 국제 파시스트 주구를 청산하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본 정책노선을 채택하여(위의 책 16-17) 도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동시에 인민위원회는 산하단체의 조직에 착수하여 9월 하순에 청년, 부녀자, 교육자, 노동자, 문화인의 전도적 통일기구로 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이어 부녀자동맹, 교육자동맹, 노동조합, 소비조합, 제주문화협회를 조직하였다(위의 책 17). 한편 이 해 12월 9일에는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되었다(위의 책 14).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이 당시 일본군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주도 전역을 지배한 도내의 자치행정기구로서, 제주도의 유일한 정당, 즉 유일한

11) 'HUSAFIK' Vol. 1, ch. 7, p.16, B. Cumings, 앞의 책(하), p.220에서 재인용.

‘정부’였으며 또한 출발초부터 전라남도에도 숙박권이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였다(Meade 1952:185). 인민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학습회, 강연회, 웅변회, 체육대회, 연예대회 등 계몽활동을 통해서 도민 속에 파고 들었고,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제주도내에 유일한 신문인 ‘제주민보’를 간행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17-18). 이 결과 제주도는 1945~1946년 년사이에 인민위원회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sup>12)</sup>

미군의 제주도 진주는 9월 28일에 이루어졌다. 라우렐 대령이 이끄는 미군 1개 연대 병력은 10대의 군용기와 2척의 LST함정편에 분승하여, 제주비행장과 산지부두를 통하여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군과 민간인의 본국 귀환작업에 착수하였다(진성범 1982)<sup>13)</sup>. 동시에 미군은 도착 다음날부터 제주도 미군정청을 설치하여, 군정관에 스타우드 소령을 임명하고 제주도 통치기구를 확립해 나갔다. 미군정청은 김문희를 도사대리로 임명하여 제주도청을 재조직하였고, 검찰청(청장 김대봉) 및 제주경찰서(서장 강동효)와 22개의 경찰서를 발족시켰으며,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원순)과 제주지방검찰청(검찰청장 박종훈)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

12) 당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수행했던 제 정책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의 중앙인민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1945.11.24~11.25)에서 보고된 강원(남)지방에서의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그것과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 당시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제 정책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 보고에 따르면 강원(남)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민위원회들은 ① 호적정리 ② 세무서를 인민위 재정부로 흡수 ③ 금융조합을 인민은행으로 개조 ④ 전국사업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세금 징수 ⑤ 소작료 3·7제 실시 ⑥ 일본인 토지 몰수, 인민위에 이관, 일본인 동산(가재도구) 몰수, 소비조합을 통해 영세민에게 분배 또는 방매 ⑦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군의 세금으로 37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 운영 ⑧ 식량 확보 ⑨ 군정에 대한 일체 투서는 인민위를 통해 하기로 결정하는 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국인민위원회 1946:106, 그리고 같은 책, p.70을 참고하라. 한편, 당시 제주도 인민위원회에서는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에 이우방, 최남식, 김경로, 오대진의 4인이 참석하였으나 발언을 한 흔적은 없다. 같은 책, p.355.

13) 이 결과 10월 23일부터 일본군 및 민간인의 본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어 그 해 11월 12일까지 총 48,524명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G-2 Report, November 17, 1945, 일일서각, 통권 제 1 권, p.287.

에서 미군정은 한때나마 일본 경찰을 미군정의 경찰로 온존시키려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였고,<sup>14)</sup> 또한 각 통치기구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친일행각으로 비난받고 있었던 자였다고 한다(김봉현·김민주 1963:21-22). 결국 미군은 친일분자를 축으로 권력기구를 지탱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 통치기구를 확립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구들은 당시의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능가하지도 못하였고 그것을 제어하기에도 역부족이었으며, 따라서 미군정은 일본군 및 민간인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Cumings 1986:201).

미군정이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점령정책은 11월 10일 미군 제 6 사단 20연대가 제주도에 도착함으로써 개시되었다(위의 책 201). 그후 곧바로 제 59군정 중대가 도착했지만 인원이 부족하여 통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제주도의 우익은 “경찰과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sup>15)</sup> 미군정의 이러한 한계는 제주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미군정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이유 외에 당시 제주도에서의 힘의 관계를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미군정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강했고 숫적으로 우세했으며 온건한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했고, 따라서 미군정은 그것을 지지하여 제주도를 통치할 방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Meade 1952:185-186).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제주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차츰 좌익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익의 우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도 점령정책을 전환시켜 나갔으며, 이때 발생한 ‘한라단사건’은 미군정의 그러한 시도의 관철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14) 9월 28일 라우렐 대령은 도착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찰의 미군정 경찰화”를 선포하였다고 한다(부만근, 1975:455).

15) Public Opinion Bureau, raw reports, December 9, 1946, 위의 책, p.201에서 재인용.

원래 한라단은 제주도 건준 산하의 보안대의 횡포를 견제하고 친일파 타도, 반공사상 계몽활동을 목적으로 김태륜, 김기오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우익단체였다(부단근 1975:44). 사건의 시발은 한라단이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습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한라단을 비롯한 일체의 테러리즘을 배격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 군정청까지 시위를 감행하여 미군정에 항의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24). 이날 밤 한라단원들은 재차 인민위원회를 습격하였으나, 오히려 보안대의 반격을 받고 10명의 한라단원이 포위되어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미군과 경찰은 인민위원회를 습격하여 보안대원 154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소지하였던 무기를 압수하였으며, 시내 일원에 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G-2 Report, 1945년 11월 8일 p.254). 이에 대하여 1,000여명의 도민이 다음날 “미군의 간섭 절대반대”, “피검자 즉시 석방”, “테러단 즉시 해산”, “민주단체에 대한 탄압 반대” 등을 요구하며 관덕정에서 항의시위를 벌이자, 미군정은 무력으로 이를 해산하고(김봉현·김민주 1963:24-25) 전날 체포된 154명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여 전원에게 각자 50엔 이상의 벌금형을 언도하였다(G-2 Report, 1945년 11월 10일 p.258). 이 사건 이후로 미군정은 좌익계에 대하여 공공연한 공격을 시작하여 애월, 한림, 용포, 금악, 금악, 고산, 대정, 중문, 안덕, 서귀, 조천 등지의 인민위원회와 산하단체의 간부들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등을 시도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26). 그러나 그 탄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1946년에도 여전히 인민위원회는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었고<sup>16)</sup> 이에 미군정은 우익 강화책을 펼쳐 나가게 된다.

46년 7월 이후 미군정은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회, 한국독립당, 비상국민회 등의 제주도지부의 조직을 적극 지원하였고(G-2 Report, 1947년 10월 14일 p.564) 또한 광복청년회(후에 대동청년단으로 개편)의 결성을 독려함으로써 우익단체들을 강화해 나간다(G-2 Report, 1947년 8월 8일 p.329).

16) Public Opinion Bureau, raw reports, May 6 and December 9, 1946, B. Cumings, 앞의 책, p.201에서 재인용.

한편 46년 본토에서의 ‘10월항쟁’ 이후 미군정은 본토에서 경찰관 100여명을 증파하여 경찰조직을 정비, 강화하였고, 그해 11월 16일에는 모슬포의 대촌에서 국방경비대 제9연대(연대장 장창국)를 창설하였으며(육군본부 1980:366-367) 해안경비대를 제주 근해에 배치하여 제주도의 좌익계를 압박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33-34). 한편 47년 3·1절 시위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여기에 대응하여 전북에서 100명, 전남에서 200명을 차출하여 제주도에 파견하고(김점곤 1983:151-152), 약 800명의 서북청년단원과 민족청년단원을 파견하여<sup>17)</sup> 좌익계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개시해 나간다.

미군정의 공공연한 공격에 직면한 제주도 좌익계는 46년부터 이에 대항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군정의 통치에 대항하는 제주도 좌익계의 저항의 특징은 사실상의 제주도 통치경험에서 표출된 자신감, 그리고 정통성의 보유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통치질서를 부인하려는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 공격, 즉 반미구호의 공공연한 제기에서 찾아진다. 이점은 당시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 인민위원회의 세력이 위축되고 있었던 관계로 그들 투쟁의 핵심구호가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돌리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뚜렷이 부각된다.

46년 1월 버스회사 종업원들이 경제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시발로 하여(김봉현·김민주 1963:29) 제주도의 좌익계는 2월 23일 민주주의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직을 정비·강화해 나갔고, 5월 중순 제주 시내 중·고등학생 약 1,000여명의 군정청앞 시위 및 하반기의 제주농업중학교와 오현중학교의 동맹 휴학을 조직함으로써 미군정에 대하여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는데, 당시 이들 학생들의 요구의 핵심은 ‘미제’의 배격과 ‘반공적이며 파쇼적인 미제의 식민지교육’의 반대에 두어지고 있었다(위의 책 30-31).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좌익계와 미군정과의 관계는 그렇게 악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제주도의 좌익계와 미군정의 관계는 제주도 우익이

17) 본토에서 증파된 우익청년단원들은 제주도의 전지역에 분산하여 상주하면서 도민들에 대하여 “체포, 구금, 고문, 테러, 협박, 공갈, 강간, 살인”을 자행하였다고 한다(김봉현·김민주, 1963:51-53).

도민의 독립주의적 심리를 이용한 도제 승격운동이 성공되고 난 후(1946. 8. 1)<sup>18)</sup>에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Meade 1952:186; Merrill 1980:152), 47년 3·1절 시위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1947년 2월 하순 좌익폭동의 정보가 새어 나오자 제주도 미군정은 직장 단위의 기념식 외에는 일체의 3·1절 경축집회를 금한다고 발표하고 경제태세를 강화했다(부만근 1975:45). 미군정의 이러한 경제태세에도 불구하고 약 2,000명의 학생과 군중은 오현중학교 교정에 모여 3·1절 기념식을 갖고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민대회장이었던 북국민학교로 행진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군중의 수는 점점 증가해 약 3,000명의 군중이 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 후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42-44). 시위대가 관덕정 앞에 이르렀을 때 미군정 경찰은 갑작스런 발포를 하여 민간인 4명을 치사케 하고 수명에게 상해를 가한 후<sup>19)</sup> 군중을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동시에 제주시 경찰서장은 목포의 국립경찰에 100여명의 증원경찰을 요청하여 그날 오후 증원경찰이 파견되어 옴으로써 제주도 경찰력을 보강하고, 다음날부터 민전 간부를 비롯한 활동가들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에 들어감으로써 제주도의 상황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 제 3 절 남로당의 5·10선거 반대투쟁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9월 17일 한국문제를 제 3차 유엔 총회의 의제로 제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카이로선언 이래 계속 추구해 왔던 대한반도정책인 4대국 신탁통치안의 전면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김학준 1981:46).

18) 이 시기는 미군정이 도내의 우익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책을 펴기 시작한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미군정은 도제 승격운동을 성공시킨 도내에 우익에 대하여 신뢰감 및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19) G-2 Report, March 3, 1947, 일월서각, 통권 제 3 권, p.548. 다른 보고는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쓰고 있다. 『민주주의』 제 18 호(1947.5.30), p.9.



미국이 이처럼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에 회부한 이유에는 소련과의 불화라는 결정적 요인 이외에 미국의 국내사정이 있었다. 미국의 합참본부는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현재의 군대와 기지를 유지함에 있어서 거의 전략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둔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있었고, 국무성과 의회는 한국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군사정부를 유지함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하였으며, 게다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이후 한국인의 반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다(조순승 1982:142-144). 한국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미국을 가장 괴롭힌 것은 북한의 발전으로서 북한 정권은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한국인 지도자들이 자기 조국의 통치에 있어서 명목적인 권위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위의 책 144-145).

이러한 때에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에 회부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유엔을 통한 통일된 민주적 한국정부 수립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서(위의 책 146) 결국 47년 여름과 가을,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고려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은 세우면서 한국문제로부터 빠져 나오려는 일종의 ‘탈한정책’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학준 1981:46). 결과적으로 북한의 독자적 발전에 충격을 받고 있었던 미국은 그들의 ‘기계적 다수’가 확보되어 있는 유엔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에 북한에 대항할 만한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려 했고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하에서 한반도 반쪽만이라도 그 구도에 짜맞추려는 것을 의미했다.

유엔을 통한 한국의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은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과정에서 하나의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의 합법성 문제에서 처음부터 대립하였고 한국문제가 총회에서 유엔 정치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로는 한반도 점령군의 철수문제와 한국 대표의 참석문제를 놓고 또 다시 열띤 논쟁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선 정부수립, 후 점령군철수와 유엔에 참석할 한국 대표의 선출을 위한 유엔임시위원단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 모스크바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그 불법성을 지적 했으며 선점령군철수, 후 정부수립과

남북한 대표의 동시초청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조순승 1982:147-155). 결국 미국의 기계적 다수가 확보되어 있는 유엔은 47년 11월 14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측 제안을 가결시켰고 당연히 소련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하였다.

한국문제는 한국인 자신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로서 한국인 대표의 참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① 본 문제 고려에 참가할 한국인 대표들을 초청할 것.

② 한국인 대표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 대표들이 한국인에 의해 정당히 선출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K)를 창설하여 한국 전토를 여행, 감시, 협의할 권리를 갖고 한국에 주재하게 할 것.

③ UNCOK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대표로 구성할 것.

④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UNCOK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

⑤ 선거 후 가급적 빨리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를 수립할 것.

⑥ 한국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동정부는 UNCOK과 협의하여

ㄱ. 국방군을 조직할 것.

ㄴ. 남북한의 군정 당국으로부터 정부 기능을 이양받을 것.

ㄷ. 가급적 빨리, 가능한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완전 철퇴하도록 양 점령국과 협정을 할 것(이하 줄임)(유엔조선위원단 1984:23-25).

UNCOK은 194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의 비협조로 북한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UNCOK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유엔 소총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결의하였고 유엔 소총회는 이에 대하여 2월 26일, “한국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의 결의와 그 이후의 사태 진전에 비추어, 소총회의 견해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결의 제 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UNCOK의 임무라고 간주한다”(위의 책 81)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유엔 소총회의 이러한 회신에 따라 UNCOK은 치열한 논쟁끝에 “1948년 2월 26일 채택한 결의에서 소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따라……조선의 일부지역에서 선거실시를 감시하며, 동선

거는 늦어도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는 데(위의 책 89-90), 이는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한 단정수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자 남한의 정국은 단독선거의 실시라는 쟁점을 놓고 다시 가열되기 시작한다. UNTCOK 보고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정치세력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료히 요약하고 있다.

1948년 1월 초 위원단의 서울 도착 이후 주요 제 정당의 대위원단 태도는 각양각색이었다.……수개 좌익정당과 극좌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각종각색의 어조로 위원단을 환영,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이 38이북 선거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2월 초까지는 이미 명백히 되고, 특히 이에 관한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독당과 민족자유연맹 소속 정당의 대부분은……위원단의 감시하에 조선의 일부지역에만 행하게 되는 선거는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좌익 주요 정당 및 사회 계단체는 위원단의 도착 당초부터……조선문제는 조선인 자신에게 맡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의 위원단에 대한 비난의 한가지 특징은 위원단은 미 ‘제국주의’의 총복의 역할을 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위의 책 54-55).

즉 이승만과 한민당, 그리고 북한 피난민을 대표하는 조선민족당은 단독선거를 강력히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46년 6월 23일 소위 ‘정읍발언’을 통하여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추진한 인물이고 또한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유착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반면 김구는 처음부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미·소 양군이 철퇴하지 않고 있는 남북의 현재 상태로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양군이 철퇴한 다음 남북요인회담을 하여 선거준비를 한 후 총선거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백범사상연구소 1978:130)라고 주장하고, 당일 UNTCOK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점령군의 즉시 철퇴와 ‘남북 한인 지도자회의’의 소집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sup>20)</sup> 김구의 이러한 일관된 주장에 비하여 김규식은 처음 약간 애매한 태

20) 김구가 제출한 의견서 전문은 『새한민보』 2권 4호(1948년 2월중순), p.8을

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27일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유엔이 이것(단정)을 주장한다면……한국의 복반을 영원히 타국의 위성국화 내지 연방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까지 합칠 고려가 있어 2/3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한에 중앙정부로서 유엔에서 승인하고 통합 방도가 있게 된다면 재론할 문제이다”<sup>21)</sup>라고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규식도 김구와 함께, 단정세력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길로 나서는데(송남헌 1985:534-564), 이는 결국 현실정치에서는 정치적 몰락의 길로 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로당의 좌익계는 처음부터 UNTCOK의 목표가 남한에서의 단선 단정수립이라고 규정하고 47년 12월 중순부터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좌익계의 이 당시의 투쟁은 UNTCOK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한국통일 방안으로서 소련안의 채택을 요구하는 정도의 온건한 것이었고, 비록 UNTCOK의 입정 후부터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단선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전략 및 역량문제에 비추어 비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Merrill 1980:161-162).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박헌영이 총파업에 대한 5개의 지령을 발표함으로써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박헌영은 이 지령을 통하여 투쟁의 계속을 지시하였고(G-2 Report, 1948년 1월 29일 p.248) 이러한 박헌영의 지령은 투쟁역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UNTCOK과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어(Merrill 1980:162) 결국 좌익계는 ‘2·7구국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7일 전평 산하의 각 노동조합이 주도한 총파업에서 시작된 ‘2·7구국투쟁’은 경인 일대를 위시하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파급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는 단선에 반대하는 폭동과 파업이 빈발하게 되었다(김점곤 1983:103; 대검찰청수사국

참고하라.

- 21) 김규식의 담화문 전문은 위의 책, p.9를 참고하라. 여기서 그는 남북요인회 담도 남한에서 개최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1965:368-373). 이 사건은 합법적 방법과 비합법적 방법을 병용하고 또 노동문제와 정치적 요구를 내포시킨 것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토대가 유약하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추종이 적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하였다는 하지의 평가(유엔조선위원단 1984:58)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의 조직역량과 동원역량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어 국내외에 걸쳐 단독정부 수립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5·10선거의 직접적인 방해투쟁의 서곡을 이루었다(김점곤 1983:104). 그러나 여전히 그 투쟁의 목표는 제한되어 있었고 특히,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직까지도 발진되지 않고 있었다.<sup>22)</sup>

좌익계에 의한 5·10선거 반대투쟁은 ‘2·7구국투쟁’을 계기로——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계속되어 갔다. 한때 잠잠했던 좌익계의 공격은 2월말의 2차 총파업을 계기로 재연되었고 5·10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가열되었다. 좌익세력은 당시 개척되었던 남북협상을 이용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투쟁과 함께 비합법적이고 격렬한 폭력투쟁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남조선단선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5·10 선거 반대를 위한 모든 투쟁을 총지휘케 하여 파업과 동맹휴학, 생산기관 파괴, 관공서 습격 등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좌익계의 5·10선거 반대투쟁은 두 단계로 구분되었다. 즉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선거를 거부하고, 선거가 제대로 시행되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그 결과 선거를 전후하여 경찰관서의 습격, 방화, 경찰관·선거 관리위원 및 우익인사의 암살, 통신망과 철도의 파괴 등이 감행되었다(김남식·심지연 1986:347).

#### 제 4 절 제주도 4·3폭동의 발발

경찰은 3·1절 시위사건 이후의 검거과정에서 약 2,500명의 청년들을 구금하고 이중 3명을 고문 치사케 하였으며 후에 이 시체를 강에 던져 버리려고 시도함으로써 도민들을 격앙케 하였다(홍한표 1948:109). 이에 대하여 제주

22) 당시 좌익계의 주장은 UNTCOK의 반대, 미·소 양군 동시철수, 선거거부 등으로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계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대검찰청 수사국, 앞의 책, pp.368-369, 372을 참고하라.

도의 민전은 “싸우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구호아래 각 직장에 ‘3·1공동투쟁위원회’ 및 시민 사이에 ‘3·1사건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장에서의 파업과 학교에서의 동맹휴학을 주도하였고, 3월 10일에는 ‘제주도총파업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 49-50). 이 결과 제주도에서는 미군정청 직원과 전도의 관공서 직원 및 대정, 중문, 조천 등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연인원 40,852명이 참가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이 개시되어 3월 18일까지 계속 되었다.<sup>23)</sup>

이 결과로 전도의 질서가 완전히 마비되고 일체의 행정기능이 상실되자 미군정은 3월 7일 제엄령을 선포하고 3월 13일 조병옥 및 본토 경찰과 우익 청년단을 파견하여 파업의 분쇄에 착수함으로써 이후의 제주도에서는 미군정 및 우익계와 좌익계의 폭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팽팽하게 긴장되어갔다.

3월 13일 곤봉과 돌로 무장한 1,000여명의 군중이 중문형무소로 몰려가 투옥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감행하였고 경찰은 이에 발포하여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무력으로 해산시켰으며, (G-2 Report, 1947년 3월 22일 p. 623) 6월 6일 구좌면 종달리의 민주애국청년회를 기습하였던 3명의 경찰이 오히려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철사로 묶이자(G-2 Report, 1947년 6월 11일 p. 139) 다음날 경찰은 100여 명의 무장경관을 파견하여 종달리 주민 70여명을 체포하여 보복을 가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60) 8월 13일 약200명의 군중들이 함덕지서를 공격하여 경찰관 2명을 체포하여 구타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여자 1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무력으로 해산시켰으며, (G-2 Report, 1947년 8월 14일 p. 359) 같은 날 조천면 북촌리를 공격하던 경찰 2명이 군중에게 체포되어 구타당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66) 한편 좌익계는 극우파인 제주도지사 유해진의 암살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는(G-2 Report, 1947년 8월 7일 p. 321) 선전공세도 동시에 진행해 나갔으며 그들의 이러한 선전공세는 “미군 축출”, “경찰 공격”, 그리고 “우익 저주”를 요구하는 전단의 살포를 통하여 더욱 가열되어 갔다. (G-2 Report, 1947년 8월 8일 p. 332) 이에

23) 『1948년판 조선연감』, p.318. 그리고 G-2 Report의 3월 14일, 15일, 19일 보고(일월서각, 통권 제 3 권, p.592, 598, 608)를 참고하라.

대하여 미군정은 8·15를 기하여 다시 좌익제에 대한 체포를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3·1절 시위사건 이래 각지에서 발생하였던 제 사건의 관련자를 예비 검속하고 좌익이라 의심되는 자는 모두 검거, 투옥하는 공격을 단행하였다. (김봉현 1978:85)—이러한 검거열풍을 피하기 위하여 수십명의 좌익 지도자들이 한라산으로 입산한 것을 비롯하여, (G-2 Report, 1947년 8월 8일 p. 329) 점차 많은 수의 도민이 한라산으로 입산 하기 시작한다.

좌·우익제의 폭력이 교차되며 난무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좌익제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 강화해 나갔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3·1절 시위사건 이후 제주도민 사이에 만연되고 있던 미군정 및 우익세력에 대한 반감의 열기를 조직하여 47년 가을부터 당원충원을 시작하였고, 이 결과 48년 초가 되던 60,000명의 당원과 전체 도민중 80%의 도민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추정되었다. (Merrill 1980:157) 이와 함께 남로당 제주도당은 지도부의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는데 이 당시 조직개편은 군사적인 경향이 더 많고, 교육 수준이 더 높으며, 보다 젊고 급진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sup>24)</sup> 또한 남로당 제주도당은 군사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1948년 2월경부터 무장투쟁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편성하기 시작하여 각구·면리 단위까지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한라산을 비롯한 여러 산악과 밀림, 고지, 암굴과 방공호 등을 근거지로 확보하고 훈련에 돌입하였다. (김봉현·김민주 1963:77-78; 김봉현 1978:98, 100-101)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민에 침투된 그들의 전 조직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자

24) Merrill의 논문, p.158, 이 때 개편된 것으로 추측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부서 명칭 및 간부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도당 위원장(안재훈, 조몽구, 김유환, 강규찬, 김용관), 군사부장(김달삼, 김성규, 이덕구), 총무부장(이좌구, 김두봉), 조직부장(조몽구, 이종우, 고철종, 김민생, 김양근), 농민부장(김완배), 선전부장(김은한, 김석환), 부녀부장(고진희), 청년부장(강대석), 보급부장(고모): 김봉현, 앞의 책, p.117.

한편, 1946년 당시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의 조직부서 명칭 및 책임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유환), 부위원장(조몽구), 조직부장(김달삼), 선전부장(김용진), 간부부장(현두길), 농민부장(이종우), 노동부장(이종우), 청년부장(김광진), 부녀부장(고진희), 재정부장(김광진): 강용삼, 이경수(공저), 『대하실록 제주백년』(서울: 태평문화사, 1984), p.549.

위대의 훈련 및 본격투쟁에 소요되는 식량과 무기의 조달을 최대한으로 뒷받침하였는데<sup>25)</sup> 여기에는 부녀자와 학생, 아동까지 가담하여 통신, 연락, 의료와 구호지원의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김점곤 1983:154)

제주도 좌익계의 이와 같은 조직정비, 개편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한때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제주도의 정국은 1948년초 UNTCOK의 입국과 활동시기를 전후하여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48년 1월 1일 포선면 가시리와 인접 부락을 습격하여 좌익계 주민들을 체포, 투옥한 것을 시발로 하여 동 3일과 4일에 걸쳐서는 중문면, 대정면, 제주시 일대 지역의 좌익계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였다. (김봉현·김민주 1963:70,76) 1월 22일 경찰은 조천에서 개최되고 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회합을 습격하여 습격 당일에 106명을 포함하여 동 26일까지 총 221명을 체포하였고, 동시에 등사기 및 다수의 문서를 압수하였다. (G-2 Report, 1948년 2월 6일, p.326 & p.331) 그런데 이 당시 압수된 문서에서 좌익계에 의해 계획되고 있던 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의 폭동의 음모가 발견되자<sup>26)</sup> 경찰은 1월 23일부터 조천면 신촌리 및 그 인접 부락민들을 체포하였고, 동시에 전도에 걸쳐서 좌익계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재개하는 한편 도민이 은닉하고 있던 일제시대의 무기류의 자진반납을 종용하였다. (김봉현·김민주 1963:74)

이렇게 경찰이 공격을 재개하고 또한 전국에서 ‘2·7구국투쟁’이 폭발함에 따라 제주도의 좌익계는 즉각적인 반격에 돌입하였다. 2월 5일 서귀포에서 경찰과 충돌한 좌익계는, 동일 한경면 고산지서를 습격하고 피집자 석방을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구좌면 일대에서도 세화, 김녕지서까지 시위를 단행하였다. (위의 책 73) 2월 7일 좌익계는 안덕면 서광리의 동

25) 제 4 장, 제 3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때 이들에게 공급되었던 무기의 대부분은 일제가 제주도에 은닉해 둔 것이었으나 어떤 경우에는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 내에 침투된 세포에 의해 공급된 것들도 있었다고 한다(김봉현·김민주 1963:78, 104).

26) G-2 Report, February 6, 1948, 일월서각, 통권 제 5 권, pp.325-326. 여기에는 경찰관 및 고위 공직자를 암살하고 경찰의 무기를 탈취하라고 지시되어 있었다.



향을 감시하던 경찰관 1명을 생포하여 생매장하였고, 이에 경찰은 동지역 주민 1명을 체포하여 고문 치사케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보복하였다. (김봉현 1978:99) 좌익계의 공격은 2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특히 치열하였다. 이 기간동안 제주도에서는 야음을 틈탄 17차례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칼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소련 국가를 부르는 군중들에 의한 경찰서 습격, 전단 살포 및 시위 등의 과정을 통하여 2명의 경찰관이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약 290명의 군중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G-2 Report, 1948년 3월 12일 p.450) 한편 '자위대'를 통하여 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좌익계는 2월 13일 한경면 저지서서 소속의 경찰관 수십명이 한림읍 금악리를 습격하자 일제의 38식 보병총, 수류탄, 일본도 등을 사용하여 경찰과 교전하여 격퇴하였고, 동 중순경 안덕지서 소속의 경찰관 및 우익청년단이 안덕면 사제리를 습격하자 자갈, 곤봉 등으로 반격하여 지서장을 생포하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김봉현 1978:99)

48년 초에 제주도 좌익계에 대한 경찰의 공격으로 재개된 이러한 격렬한 공방은 3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완화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3월 초순에 발생한 도민에 의한 함덕지서 습격사건(G-2 Report, 1948년 3월 27일, p.502)과 경찰 및 우익청년단에 의한 한림, 애월 지구의 '자위대' 모임 기습사건(김봉현 1978:104)을 끝으로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잠시 동안의 냉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의 좌익계가 4·3폭동을 감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발생하였던 쌍방간의 공방을 분석하고 자체의 역량을 재충전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냉전도 결국 3월말경 개최된 김달삼, 조몽구 및 국방경비대 제9연대 문상길 등의 회합에서 무장폭동이 결정됨으로써 (육군본부 1954:10) 종결되고,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 한라산을 비롯한 각지의 산악 위에서 무장투쟁을 알리는 봉화가 불타오름으로써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직 피해자만 남은 기나긴 싸움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 제 6 장 결 론

제주도 4·3폭동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최초로 발생한 조직적인 반미 무장투쟁이다. 1948년 4월 3일 ‘매국 단선’의 반대와 ‘미제 축출’을 요구하면서 한라산에서 내려 온 500여명의 무장계릴라들과 1,000여명의 동조자들의 도내 경찰관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이 폭동은 이후 약 1년여에 걸쳐 도내의 행정과 치안을 완전히 마비시켜 새로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혈참사를 야기하여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 폭동의 발발 이유와 그 배경을 고찰한 이 글은 이 폭동이 우연히 혹은 어떤 하나의 계기에 의해서만 도발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과 해방 당시 제주도에서 전개되었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미군정의 대한반도정책에서 파생된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발하였다는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도민은 조선 말기부터 조선 봉건정부의 수탈에 허덕여 왔고, 도민의 이러한 고통은 일본의 어장침탈과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도의 횡포에 의하여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나 도민은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고, 도합 6차례에 걸쳐 여기에 격렬히 저항하였다. 도민의 이러한 저항은 그들의 의식저변에 깔려 있던 독립주의적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직접 봉건국가를 상대로 하여 전개되었고, 동시에 제국주의 침탈에 항의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주도 민중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먼 훗날 제주도에서 발생한 갈등이 도민과 미군정 경찰 및 우익세력 사이의 불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우익 세력의 배후에 숨어 있는 커다란 권력체인 미군정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한편 제주도민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비록 조선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숙임수에 의하여

결국 좌절되고 말았지만, 먼 훗날까지 정신적인 유산으로 계승되어 새로운 무장투쟁이 다시 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저항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통치가 제주도에 강요되었을 때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특히 이때 제주도에 유입된 새로운 세계관인 사회주의 이념은 이후 도민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해방 당시의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급격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 미약한 지주—소작관계에 의한 대체권력의 부재, 본토에서 가장 멀리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 발달되지 못한 운송·통신시설 및 상대적으로 분화된 직업구조 등은 제주도민의 급진적인 정치참여를 조장하였으며, 서북청년단 등의 극우 우익단체의 도민에 대한 만행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대응하여 발생한 도민의 무장투쟁은 그 군사적 자원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가 제주도에 남기고 간 군사적 유산을 이용하여 시도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 투쟁주체의 뇌리에는 일제시대 말기 미군기에 의해 제주도에 가해진 ‘이유 없는’ 폭력의 잔영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군을 격파하고 해방군으로 한반도를 점령한 미군은 한반도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한다는 정책의 목표를 명백히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이었던 신탁통치안이 한민족의 저항과 소련과의 협상의 어려움 등의 난관에 봉착하여 포기되고, 한반도의 한쪽이 독자적인 분리, 발전을 이루어 사회주의권으로 편입되어 가자, 미국은 나머지 한쪽 만에서라도 그 정책의 목표를 확정지우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것은 결국 이후 남한내에서는 좌익계가 ‘실제적으로’ 존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목표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제 계획안은 제주도에도 그대로 강요되었다. 본토와 달리 제주도에는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좌익계가 우익을 압도하여 사실상 제주도를 지배하였으며, 따라서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점차 제주도의 우익세력을 강화하면서 정책의 목표를 명백히 관철시키

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좌익계가 치열하게 저항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은 긴장되어 갔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은 1947년 3·1절 시위사건 때에 발생한 미군정 경찰의 발포에 의하여 마침내 폭발하였으며, 이후 미군정과 제주도 좌익계는 격렬하게 폭력을 교환함으로써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제 제주도의 좌익계는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미군정에 굴복하든가 아니면 미군정에 저항하여 결국 몰락을 자초하든가의 선택을 강요당하였고, 남한만의 5·10선거가 가까와짐에 따라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처참한 유혈사태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제주도 4·3폭동이 제주도민이 겪어야 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 해방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4·3폭동을 야기하였던 이러한 제요인, 배경 등이 4·3폭동이 결과한 유혈 사태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이 글이 다루지 못한 문제로써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3폭동의 진행 과정에서 미국이 취했던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미국은 분명히 게릴라에 대한 반격작전의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사고문의 자격으로 그 반격작전을 일정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4·3폭동이 야기한 유혈사태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우익계 진압세력은 대게릴라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분별력있게 행동해야 했었다. 그들은 대게릴라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선입관에 지배되어 종종 게릴라와 무고한 양민을 구별하지 않는 공격을 취했고, 이 결과 제주도민이 겪어야 했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유혈사태에 대한 제주도 좌익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당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던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소홀히 했고 따라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또한 올바른 수 없었다.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결여는 결국 그들을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나서게 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몰락과 제주도민의 과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 료

- 고영민, 1987. 『해방 정국의 증언 : 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 사계절.
- 김봉현 · 김민주(공편), 1963.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 자료집』 대판 : 문우사.
- 미국무성 비밀의교문서 · 김국태(역), 1984. 『해방 3년과 미국 I :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서울 : 돌베개.
- 백범사상 연구소, 1978. 『백범어록』 서울 : 화다.
- 유엔조선위원단 · 임명삼(역), 1984. 『유엔조선위원단 보고서』 서울 : 돌베개.
- 이순옥, 1932. 『이재수 실기』 대판 : 증도문화당.
- 전국인민위원회(편), 1946.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 의사록』 서울 : 동대회 서기부.
- 조병옥, 1959. 『나의 회고록』 서울 : 민교사.
- 호통관(편저), 1958. 『의회사 초록 제 1 집』 서울 : 법제신보사.
- 조선총독부, 1929. 『生活狀態調査(其二) : 濟州島』
- 제주도청, 1939. 『濟州島勢要覽』
- 조선통신사, 1947. 『1948년판 조선연감』 서울 : 조선통신사.
- 조선은행, 1948. 『조선경제연보』
- \_\_\_\_\_, 1949. 『경제연감』
- 『민주주의』
- 『황성신문』
- The Korea Review*
- Sands, W.F., *Undiplomatic Memories*: 1986. *The Far East*, 1896~1904, 김훈(역), 『조선의 마지막 날』 서울 : 미완.
- USAFIK, G-2 Periodic Report, 일월서자(편), 1986. 『미군정 정보보고서』 서울 : 일월서자.
- 김인화, 1963.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구 상황 : 2차년도 사업계획”, 『제주도』 제 8 호.
- 임창준, 1982. “조선 독립 만세 사건”, 『제주신문』(1982.3.1)
- 정동웅, 1948. “동란 제주의 새 비극 : 박대령 암살 재판기”, 『새한민보』 2권 16호(1948년 10월 상순).
- 조덕송, 1948.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3권 6호(1948.7).

- 전성범, 1982. “제주도의 태동:도정의 첫걸음”, 『제주신문』(1982.8.25)  
 ———, 1982. “제주도의 태동:해방과 군정출범”, 『제주신문』(1982.8.5)  
 홍한표, 1948.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 3권 7호(1948.8)

## 2. 단행본

- 강대원, 1970. 『해녀 연구』 제주:한진문화사.  
 강용삼·이경수(공저), 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서울:태광문화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9. 『한국전쟁사 I:해방과 건군』 서울: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김남식, 1984. 『남로당 연구』 서울:돌베개.  
 김남식·심지연(공저), 1986. 『박헌영 노선 비판』 서울:세계.  
 김봉현, 1960. 『제주도 역사지』 대판:교문사.  
 ———, 1978.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 大阪:國書刊行會.  
 김석익·김계연(역), 1976.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제주:제주도 교위.  
 김옥희, 1979.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김용섭, 1984.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II):농업변동, 농학사조』 서울:일조각.  
 김점곤, 1983.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서울:박영사.  
 김정원의, 1982.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돌베개.  
 김종범, 1946. 『조선 식량 문제와 그 대책』 서울:창전사.  
 김태능, 1982. 『제주도사 논고』 서울.  
 김학준, 1981.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박영사.  
 대검찰청 수사국, 1965. 『좌익사건실록 I』 서울:대검찰청 수사국.  
 박갑동, 1983.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인간사.  
 박정식, 198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서울:청아.  
 박일원, 1948. 『남로당 총비판(상):남로당의 내막』 서울:극동정보사.  
 부만근, 1975. 『광복제주 30년』 서울:문조사.  
 송남현, 1985. 『해방 3년사, 1945~1948』 서울:까치, I 권과 II 권.  
 육군본부, 1954. 『공비 토벌사』 서울:육군본부 전사감실.  
 ———, 1980. 『창군 전사』 서울:군사 연구실.  
 조순승, 1982. 『한국분단사』 서울:형성사.  
 풀빛 편집부(편), 1981. 『전통시대의 민중운동(하):홍경래난에서 이필재난까지』 서울:풀빛.  
 한동구, 1975. 『濟州島:三多の懺哭史』 大阪:國書刊行會.  
 한창수, 1984.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서울:지양사.  
 한창원, 1984. 『창군』 서울:박영사.

- Berger, C., 1964. *The Korea Kno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umings, B., 1986.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김주환(역), 『한국전쟁의 기원: 해방과 단정의 수립, 1945~1947』 서울: 청사, 상권과 하권.
- Gayn, M., 1948. *Japan Diary* (New York: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 Green, A.W., 1950. *The Epic of Korea*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 Henderson, G. 197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Chang-mun and Chung, Jae-sun. 1964. *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 (Seoul: Catholic Korea Publishing Co.)
- Kim, Se-jin, 1971.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auterbach, R.E. 1984. *Danger from the East. Part II*, 국제신문사 출판부(역), 『한국미군정사』 서울: 돌베개.
- McCune, G.M. 1950.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eade, E.G. 1952.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ersity).
- Scalapino, R.A. and Lee, Chong-sik 1972.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3. 논 문

- 강만생, 1986. “한말 일본의 제주 어업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 3 집.
- 강창일, 1984. “1901년 제주도 민란에 대하여: 한말 천주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미간행.
- 김인제, 1967. “제주의 신축년 천주교 교란: 외교면에서의 고찰”, 『제주도』 제 39 호.
- 김진봉, 1981. “철종조의 제주 민란에 대하여”,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 김태능, 1968. “양재해의 난과 제주민의 자주 기도”, 『제주도』 제 34호.
- 남도영, 1969.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 한국 목축업 연구의 일단”,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 4 집.
- 梶村秀樹, 1983.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 사계절 편집부(편),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이조말기에서 해방까지』 서울: 사계절.
- 박광성, 1981. “고종조의 민란 연구”,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 \_\_\_\_\_, 1969. “임술민란의 연구”, 『인천교육대학 논문집』 제 4 집.

- 박구병, 1974. “배앗긴 생활권”, 신구문화사, 『한국현대사』 제 2 권(서울:신구문화사).
- 박종근, 1985. “갑오개혁과 김홍집정권”, 양상현(편), 『한국 근대 정치사 연구』 서울:사계절.
- 이원순, 1967. “한말 제주도 통어문제 일고”,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제10집.
- 정석중, 1981. “홍경래의 난”,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 최상룡, 1983. “미군정기 한국:아시아 냉전의 쏠림”, 『한국사회연구』 1, 서울:한길사.
- 최진욱, 1981. “1860년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 풀빛 편집부(편), 앞의 책.
- 한우근, 1971. “개항후 일본 어민의 침투(1860~189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 1 집.
- 현제순, 1964. “한말 한·일 어채문제의 일 연구:제주도 어채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Bix, H.P. 1984. “Regional Integration: Japan and South Korea in America's Asian Policy,” Baldwin, F. (ed.), 사계절 편집부(역), 『한국현대사, 1945~1975』 서울:사계절.
- Cumings, B.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in Liberated Korea: Mobilization and Revolt in the Kyongsang Provinces, 1945~1950”,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
- McColl, R.W. 1967. A Political Geograph of Revolution: China, Vietnam and Thailan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Merrill, John 1980.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 Merrill, John 1982.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Mitchell, E.J. 1968. “Inequality and Insurgency: A Statistical Study of South Vietnam,” *World Politics*, Vol. 20, no. 3.
- Mitchell, E.J. 1969. “Some Econometrics of the Huk Rebell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3, no. 4.
- Zagoria, D.S. 1971. “The Ecology of Peasant Communism in In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1.